

---

#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

---

2026. 6. 30.



관계부처 합동

## 순 서

I. 추진배경 .....	1
II. 현황 및 문제점 .....	6
III. 목표 및 정책방향 .....	9
IV. 세부 정책과제 .....	10
V. 향후 추진계획 .....	39
[참고1] 국민·기업 체감 20대 핵심 과제 ....	40
[참고2] 정책 과제 목록 .....	42

# I. 추진배경

## 1 사회연대경제 정책환경

◆ 저출생·고령화, 양극화, 디지털·기후 전환 등 복합위기(polycrisis) 심화로 기존 정부·시장 경제 한계 부각, 사회연대경제의 정책적 중요성 확대

- (인구·사회구조 변화) 기대수명 증가, 저출생·고령화, 생산인구 감소 등 인구 변화에 따라 연금·의료·돌봄 등 사회보장 재정 부담 확대
  - ※ 한국의 초고령 사회 진입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sup>24</sup>)에 따라 노인 장기요양 수요 급증 (장기요양보험 급여 수급자 116.5만명(<sup>24</sup>) → 334만명(<sup>50</sup>))
  - 이와 함께, 1인가구·맞벌이 가구 증가 등으로 돌봄 서비스 수요 급증
  - 사회연대경제는 지역 기반 돌봄·사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기존의 사회안전망 보완 및 복지 사각지대 완화 기여
  - ※ (예시) **일본 지역포괄케어 시스템** : 의료복지생협 등 사회연대경제조직은 주민 참여형 상호 돌봄망을 구축하여, 생활권 내 고령자 대상 의료·돌봄·주거 등 서비스를 통합 제공
- (지역소멸 위기 심화) 비수도권 인구 감소로 인해 지역 경제 기반 약화 및 지역 내 일자리·서비스 공급 체계 붕괴 우려
  - ※ 국민의 절반 이상(50.9%)이 수도권에 거주, 지역내총생산(GRDP) 격차 증가 추세(<sup>24</sup>)
  - 사회연대경제는 지역을 기반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 서비스 공급, 공동체 형성 등 역할을 수행하며 지역 활력 제고에 기여
  - ※ (예시) **미국 에버그린** : 제조업 쇠퇴로 붕괴된 지역경제에 대응하여 병원, 대학 등 수요를 기반으로 세탁, 에너지, 도시농업 등 협동조합을 구축하여 일자리 및 지역순환경제 회복
- (사회자본 감소) 개인주의 심화, 공동체 해체 등으로 인해 구성원 간 신뢰와 협력의 토대인 사회적 자본 약화
  - ※ 신뢰 등 사회적자본이 주요 선진국 대비 낮은 수준(세계 167개국 중 107위, '23. 영국 레가툼)
  - 사회연대경제는 공동체성 회복 및 사회적 자본 확충에 기여
  - ※ (예시) **서울 동자동 쪽방촌** : 빈곤·고립 상태의 주민들이 공제조합(소액저축, 긴급대출)과 마을 식당을 자발적으로 운영하여 이웃간 일상 교류 회복 및 신뢰 축적

- **(기후·환경 변화)** 기후 위기로 인한 식량 위기, 재난 발생 등 사회·경제적 영향 확대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탈탄소 전환 요구\*** 강화
  - \* 파리협정에 따라, 모든 국가에 온실가스 감축 의무 부여(전세계 온실가스 43% 감축(~'30))
  - **사회연대경제**는 재생에너지, 친환경 생산·소비 등으로 **환경문제 대응**
  - ※ (예시) **독일 시민에너지 협동조합** :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1,000여개의 시민에너지 협동조합은 재생에너지 발전수익을 복지·교육 서비스에 재투자하는 등 지역사회에 환원
  
- **(디지털 전환 가속화)**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AI) 확산으로 인한 산업구조 재편에 따라 **고용 형태 다양화 및 일자리 구조 변화 가속화**
  - 비정형·플랫폼 노동 증가에 따른 **고용 안정성 저하** 및 디지털 역량 격차에 따른 **취약계층 노동 진입·적응 어려움 확대**
  - ※ 자동화·AI 도입 등으로 향후 10년간 고용규모 14% 감소 전망('24, 한국고용정보원)
  - **사회연대경제**는 지역기반·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공동체 기반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고용안정 및 사회안전망 보완**에 기여
  - ※ (예시) **미국 업앤고(UP&GO)** : 플랫폼 확산으로 불안정해진 고용 구조에 대응하여, 이주 여성들이 설립한 가사·청소 서비스 협동조합 플랫폼으로, 노동자들의 수익·권익을 보장
  
- **(사회격차 심화)** 소득·자산 양극화가 발생하는 가운데, 높은 청년 실업률, 낮은 여성 고용률 등 **계층간 고용 불균형 발생**
  - ※ 청년 실업률 6.1% (전체:2.8%), 여성 고용률 63% (남성:76.5%)
  - **사회연대경제**는 **취약계층 고용 확대 및 고용 안정성 제고**
  - ※ (예시) **영국 빅이슈** : 홈리스에게 잡지 판매권을 부여하여 자립을 돕는 모델로, 전세계 35개국 이상 확산하며 양극화 해소 및 사회 통합에 기여
  
- **(대외 환경 변화)** 중동 분쟁 등 지정학적 갈등 확대, 글로벌 공급망 재편, 에너지 가격 변동성 심화 등으로 **세계 경제 불확실성 확대**
  - ※ 중동 불확실성, 유가 급등에 따라 OECD는 한국의 경제성장 전망 하향 (2.1→1.7%)
  - **사회연대경제**는 **외부 충격에 대한 회복력을 보완하는 역할 수행**
  - ※ (예시) **스페인 몬드라곤 협동조합** : 주력 계열사인 파고르전자 파산('13년) 당시, 조합 내 고용 재배치, 임금 조정 등을 통해 해고 최소화

## 2 국내외 동향

### 1 해외 동향

◆ 전 세계는 팬데믹 등 위기 상황 및 실업·빈곤·양극화 등 사회문제에 대한 정책적·사회적 해법으로서 사회연대경제 주목, 법·정책 마련하여 지원

- 양극화, 기후위기, 저출산 고령화 등의 경제적 위기 및 공동체 연대·복지 기능 약화에 직면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사회연대경제 중요성 부각
  - UN은 '23년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 코로나 19 등 보건 위기, 기후 위기 등 변화 속에서 사회연대경제가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음을 공식 인정
- 해외 선진국에서는 사회연대경제가 경제의 한 축으로서 기존 경제 시스템의 보완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 ※ 유럽연합(EU) 회원국의 경우, 사회연대경제가 전체 GDP의 6~8%, 고용의 6.3% 차지
  - 다양한 성공 사례를 통해 위기 상황에서 사회문제를 극복하고 낙후된 지역사회를 살리는 순기능을 확인함
    - ※ 캐나다 퀘벡주 : 90년대 제조업 붕괴로 낙후된 지역 사회를 살리기 위해, 정부·노동계·시민사회가 주도적으로 사회연대경제·금융 육성 → '08 금융위기에서도 일반기업 대비 2배 높은 생존율을 기록, 퀘벡 전체 고용의 10%를 책임지는 핵심 경제 주체로 성장
- 전 세계적으로 사회연대경제 기본·개별법 제정, 지원 정책을 마련하여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있음
  - OECD 등 국제기구들은 회원국에 사회연대경제 전반을 포괄하는 법·제도적 설계, 정책 수립을 권고('22)하였으며,
    - ※ 프랑스('14), 스페인('11), 포르투갈('13), 캐나다(퀘벡, '13) 등에서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제정
  - 각국은 다양한 주체를 사회연대경제로 포괄하고, 통합 법, 거버넌스, 지원 체계 및 금융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중
    - ※ 프랑스 : 사회연대경제법을 통해 사회연대경제의 법적 정의 및 민관협력 기반 마련, 국가투자은행(Bpifrance) 및 '90-10펀드' 등 민간 상품을 통해 자금 지원

## 2 국내 동향

■ **그간 자생적·정책적으로 발전해 온 사회연대경제가 다시 도약하여 지역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이 요구됨**

- 국내에서는 국가 산업화 주도 시기에 농촌, 저소득층 중심으로 상호 부조 성격의 경제활동(신협, 새마을금고 등)이 등장하였으며,
  - 복지제도 구축 이전, 외환위기 등에 따른 실업, 빈곤 등의 구조적 문제를 시민사회가 대응하기 시작하면서 자생적으로 발전
  - 2000년대 이후, 대내외 충격에 따른 고용·소득 불안정, 지역경제 침체가 고착화되면서, 사회연대경제 제도 및 지원정책 도입
  - ※ 사회적기업('07년), 마을기업('11년), 협동조합·자활기업('12년), 소셜벤처('19년) 등
- 특히, '17년 100대 국정과제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채택하고, 전부처 차원에서 분야별 지원 정책을 추진하면서 대폭 성장
  - ※ ('17~'21년) 28개 분야별 대책 수립, 정책자금 1.5조원 공급, 공공구매 확대('20, 1.89조원)
  - 그러나, 지난 정부 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재정 지원·인프라 축소로 인해 생태계 규모 위축, 지속가능성 저하 우려
  - ※ 예산('23년 → '24년) 변화 : (사회적기업) 2,042억 → 830억, (협동조합) 75억 → 16억, (마을기업) 70억 → 27억
- 최근, 저출산고령화, 지방 소멸 등 지역문제 해결 및 공공서비스 공급 주체로서의 사회연대경제 역할이 재조명됨에 따라,
  - 사회연대경제의 성장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인 재정·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 <국정과제 81번>

-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 : ①법적 기반 마련, ②민관협력 지원체계 구축, ③사회연대금융 활성화, ④사회연대조직 성장 지원

### < 대통령 말씀 (25.12.16. 국무회의) >

“사회연대경제 제도 조성 등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방안 추진에 속도를 내주기 바람”

### 3

## 사회연대경제의 개념과 포괄범위

□ (개념) 구성원 간의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민주적 운영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고 지역사회를 혁신하는 경제활동

※ 국가·국제기구에 따라 사회적경제, 연대경제, 사회연대경제 등의 용어가 혼용되어 왔으나, 최근 ILO, UN 등 국제기구에서 “**사회연대경제(social and solidarity economy)**”로 채택 추세

#### 주요 특징

- ▶ (연대·협력)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표로, 신뢰 기반으로 상호 협력
- ▶ (민주적 운영) 구성원의 자율적 경영 참여, 1인 1표 행사 등 민주적 의사결정 원칙
- ▶ (사회적 가치 추구) 경제활동 뿐만 아니라, 공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기후위기 대응, 지역순환경제 등)를 우선 추구
- ▶ (지역사회 혁신)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주민·조직·지자체 등이 협력하여 새로운 방식과 구조를 개발

□ (포괄범위) 사회연대경제기본법(26.4.22 법사위 통과)상 사회연대경제기업은 5대 사회연대경제 핵심 주체와 개별법에 따른 8개 개별 협동조합\*을 포함

#### <사회연대경제 5대 주체>

구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소셜벤처
부처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 등**	중소벤처기업부
근거 법령	「사회적기업 육성법」 (‘07.시행)	「마을기업법」 (26.8.시행 예정) ※ ‘10.~ 사업추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00년 시행)	「협동조합기본법」 (‘12년 시행)	「벤처기업법」 (21년 법적 근거 마련)
목적·정의	◦ 취약계층 고용 창출, 사회서비스 확충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	◦ 주민이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일자리 창출	◦ 저소득 실업자의 경제적 자활(자립),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기업	◦ 조합원이 공동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발적 결성	◦ 혁신기술,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추구
제도	인증	지정	인증	신고(일반)/인가(사회)	판별
요건	◦ 취약계층 비율 등 사회적목적 실현 ◦ 이윤 2/3, 사회적 목적 재투자(정관)	◦ 공동체성(최소 5인 이상의 주민 참여 등) ◦ 기업성 · 지역성 ◦ 공공성	◦ 2인 이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가 설립 및 운영	◦ 협동조합 - 지자체 신고/수리 ◦ 사회적협동조합 - 부처별 신청/인가	◦ 사회성 ◦ 혁신성장성
개수 ('24)	3,762개	1,726개	962개	26,539개	2,504개

\* 중소기업협동조합(중기부), 소비자생활협동조합(공정위), 농업협동조합(농식품부), 수산업협동조합(해수부), 신용협동조합(금융위), 산림조합(산림청), 새마을금고(행안부), 업연초협동조합(재경부)

## II. 현황 및 문제점

### 1 현황

#### □ (양적 성장) 사회연대경제조직 및 고용인원은 지속 증가 추세

- 사회연대경제조직은 최근 예산 감소 등에도 불구하고 지속 증가하여, 약 3.5만개 이상 설립('24년 기준)

\* 조직 수 : ('16) 14,948개 → ('20) 26,492개 → ('24) 35,493개

고용 인원 : ('16) 91,100명 → ('20) 163,649명 → ('24) 362,266명

- 업종 유형이 다양화되고 있으며, 비수도권 비중도 높은 수준

\* 조직 유형별 편차는 존재하나, 제조업(약 6%), 여가 서비스업(약 9%), 농·어업(약 8%) 등 다양한 업종에 분포하며, 비수도권 비중은 약 62%로 지역 기반 확산

#### < 주요 사회연대경제조직 현황 >

##### □ (사회적기업) '24년 기준 총 3,762개소, 근로자 수 73,482명 (취약계층 65%),

- (유형) 기업별 추구 사회적 목적에 따라 일자리제공형 66%, 사회서비스제공형 8.9%, 지역사회공헌형 9.6%, 혼합형 5.2% 등으로 유형 구분

- (매출) '24년 기준 총 매출액은 7.7조원 (공공 3.5조원, 민간 4.2조원)이며, 기업 평균 매출액은 21.6억원 (공공14.7억원, 민간14.1억원)

##### □ (협동조합) '25년 기준 총 31,531개소, 근로자 수('24년) 216,179명 (취약계층 65%)

- (유형) 일반협동조합 77.8%, 사회적협동조합 21.6%, 연합회 0.4% 등

- (매출) '24년 기준 평균 매출액은 3억 1,973만원

##### □ (마을기업) '24년 기준 총 1,726개소, 근로자 수 24,134명

- (유형) 일반식품·전통식품 등 지역농산물 가공·판매 업종이 56.6%로 많은 비중 차지(일반식품 44%, 전통식품 12%), 관광체험(13%) 등 문화관광 부문도 다수

##### □ (자활기업) '25년 기준 977개소, 근로자 수 9,613명

- (유형) 집수리(21.2%), 청소(20.4%), 배송(15.5%), 음식점(11.3%) 등

##### □ (소셜벤처) '25년 기준 2,504개소, 근로자 수 49,499명

- (유형) 제조업(38.2%), 정보통신업(14.2%), 도매 및 소매업(7.9%) 등

- **(제도 및 인프라)**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기반 확충
  - 마을기업법 제정(26.8.시행) 등을 통해 주요 조직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전년대비 사회연대경제 예산 대폭 확대로 정책 추진 기반 강화
    - ※ 관련 예산('25년 → '26년) 변화 추이 : 사회적기업 284 → 1,180억원, 협동조합 15.8 → 29억원, 마을기업 16.8 → 53억원, 신규 사회연대경제 총괄 예산 118억원 신설
  - 지방정부는 사회연대경제 관련 조례 제정 및 시·도 지원센터 운영 중
    - \* (조례) 총 243개 지방정부 중 219개(약 90%) 지역에서 관련 조례 설치
    - (시·도 지원센터) 조례에 따라 14개 시·도에서 사회연대경제 지원 센터 운영 중
- **(성장 지원)** 사회연대경제조직 성장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사업 추진
  - 조직 유형별 중간지원조직\* 등을 통해 창업·경영 컨설팅, 사업화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사업 운영
    - \*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마을기업 지원기관, 광역·지역 자활센터
  - 온오프라인 유통 지원 및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운영 등 판로 확대 지원
    - ※ 우선구매 실적(구매액, 총구매액 대비 비율) : 사회적기업 1조 8,171억원, 2.77% ('21년) → 2조 3,312억원, 3.08%('24년), 사회적협동조합 3,090억원, 0.47% ('21년) → 5,018억원, 0.88% ('24년)
- **(지역사회 문제 해결)**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 문제 해결에 기여
  - 특히, 보건·사회서비스 분야 조직은 약 3,700개로(전체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약 10%), 지역 내 서비스 공급의 주요 주체로서 역할

< 사례: 안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

- ▶ 목적 : 지역주민과 의료인이 협동하여 보건, 의료 등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여 건강한 지역공동체를 조성
- ▶ 주요내용 : 재택의료센터, 재가장기요양센터 등을 운영하면서, '치료보다 예방', '과잉 진료보다 적정 진료'를 목표로, 단순 치료를 넘어 건강예방 활동 및 건강 증진 서비스 등 보건, 의료, 돌봄이 결합된 통합서비스를 제공

## 2

## 문제점

### □ **(양적·질적 성장 한계)** 국제 비교시 양적, 질적으로 부족한 수준

- 국내 사회연대경제조직은 양적으로 빠르게 확대되었으나, 시장 규모는 국제적 수준에 비해 여전히 제한적이며,
  - ※ 국내 전체 기업 대비 사회연대경제 조직 비중<sup>1)</sup> : (고용) 약 1.8% (vs EU : 6.3%), (GDP) : 0.8% (vs EU : 6~8%)
- 규모가 영세하여 사회문제 해결 등 역할 수행에 한계
  - ※ 사회연대경제조직 평균 매출액 : 약 5.88억원 / 평균 근로인원 : 약 10.2명

### □ **(제도 및 인프라)** 사회연대경제 통합 제도·인프라 구축 미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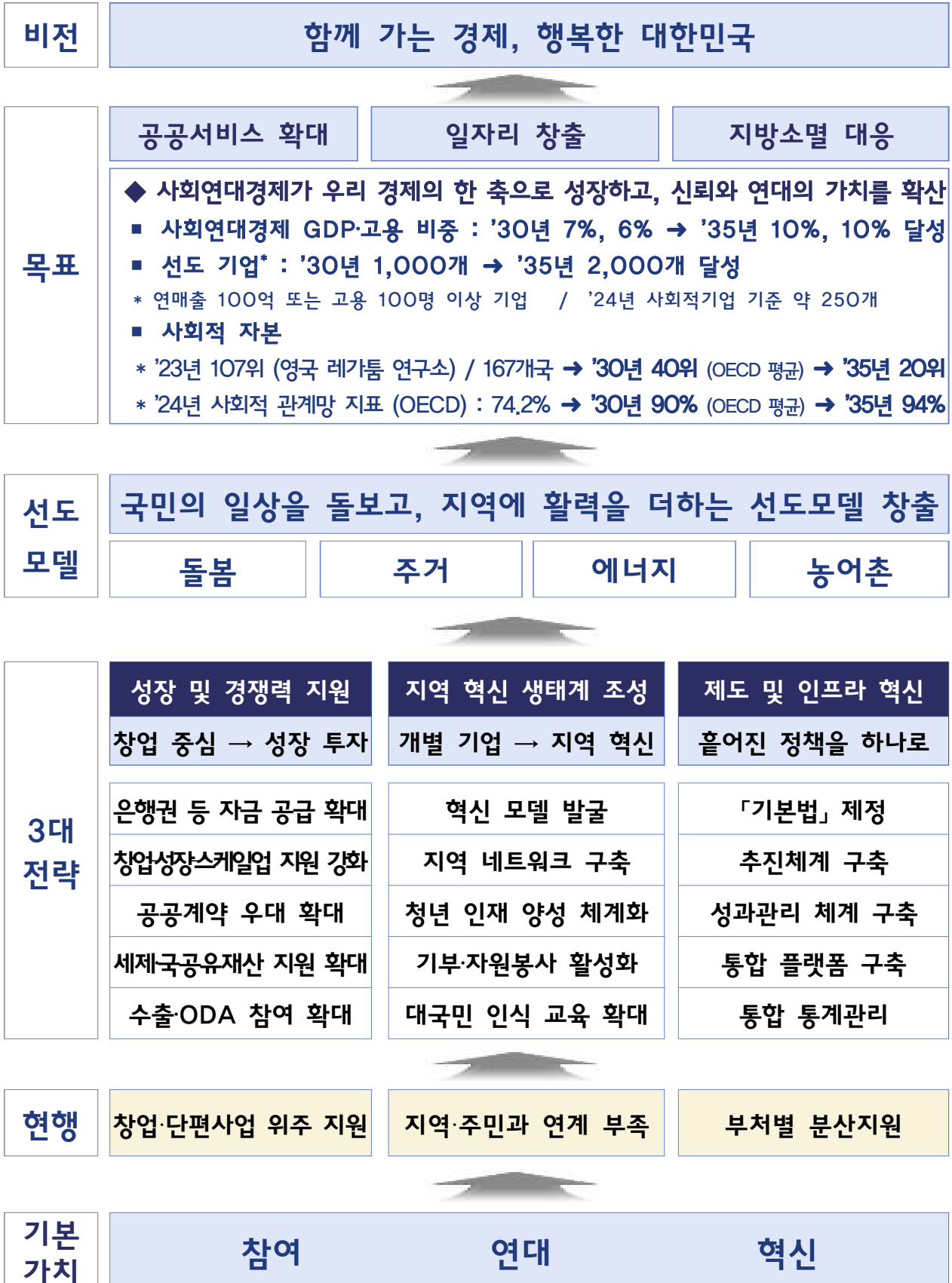
- 조직 유형 중심으로 법·인증·통계·지원 등이 개별적으로 운영되어, 사회연대경제 정책 간 연계성 및 정합성 한계
  - ※ 사회연대경제조직은 여러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으나(협동조합이면서 사회적기업 등), 인증·통계관리 등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효율적 관리·지원 어려움

### □ **(성장 기반 미흡)** 기업 규모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성장 기반 부족

- **(금융)** 정책금융 중심 대출 보증 중이나, 통합적인 지원 제도 및 기반 미비로 투·융자 접근성이 낮고, 제도·환경 변화에 따른 자금 공급 안정성 부족
  - ※ "사회연대경제조직은 사회적가치 실현이 강조되어, 민간 기관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기 어려우므로, 별도의 대출·보증·투자 등 금융 제도 필요" (사회적금융 씨앗, '26.2.24.)
- **(판로)** 규모의 경제 및 마케팅 역량 부족 등 민간 시장 경쟁력이 제한적이며,
  - 공공구매 또한 우대 기준 및 현장 인식 부족으로 판로 확대 기반 미흡
    - ※ "우선구매 및 수의계약 확대 등 공공 판로 확대 지원이 필요하며, 제도를 실제로 활용하는 담당 공무원의 인식 변화가 필요" (시니어 기업가 현장 간담회, '26.4.3)
- **(인력)** 유능한 인재의 유입 및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기반 미흡
  - ※ 생애주기 교육체계 및 '교육-일경험-취창업'의 경력 경로 구축 필요 (인재양성 세미나, '26.3.13.)
- **(산업)** 분야(돌봄, 문화·예술 등)별 기업 육성 기반이 부족하여 각 산업 내 역할 확대 및 규모화에 한계

1) 국내 통계('24)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농·수협, 새마을금고 등 개별법상 협동조합 제외)  
EU 통계('21) :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외 비영리협회, NGO, 재단 포함

### III. 목표 및 정책방향



## IV. 세부 정책과제

### 1 성장 및 경쟁력 지원

※ ◆표시 과제는 기본법 시행과 연계하여 추진

◆ **사회연대금융·판로·세제 등 성장 기반을 확충하고, 창업부터 성장스케일업까지 단계별 지원을 강화하여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자생력 및 경쟁력 제고**

구분	현재 : 성장 인프라 미흡	➔	개선 : 종합지원체계 구축
금융	수익성 중심 금융 평가 및 공급자 중심 자금 공급		자생적 금융 생태계 조성 및 금융 공급 규모 확대
창업성장 지원	단기·공모 중심의 일회성 지원		생애주기별 창업-성장-스케일업 지원체계 강화
공공구매	공공구매 확대 한계		공공계약 우대 확대를 통한 공공시장 접근성 제고
지방세	사회적기업 중심 지방세 감면 운영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 대상 확대
ODA	규모·역량·자원 등 한계로, 개별 사연경 기업의 ODA 참여가 제한적		컨소시엄형 사업방식 도입으로 사연경 기업의 참여 기회 확대

### 1 사회연대금융 활성화

#### < ① 자생적 금융 생태계 조성 >

- **(인프라 확충)** 사회연대금융 전담·중개기관을 지정·운영 추진을 통해 사회연대경제(이하 사연경) 조직 대상 체계적 금융공급 기반 조성<sup>행안부</sup>
- **(전담기관◆)** 투·융자 등 금융지원 사업, 연구개발, 중개기관 육성, 민간·지역 기금\* 조성 지원 및 투자 등 종합 수행
- \* (민간기금) 사연경 조직이 자발적으로 설치운영 / (지역기금) 지방정부가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
- **(중개기관◆)** 지방정부·금융기관 등의 재원 운용 위탁, 각종 금융 지원 및 중개사업 수행

※ 금융기관과 사연경 기업 간 정보비대칭 해소, 공급된 자금에 대한 사후관리

- **(제도 정비)** 사연경 조직의 금융지원 활성화 및 전용 상품 개발 지원, 사회적 가치 측정·평가도구 개발 및 공제사업 활성화
  - **(사회적 가치 측정)** 현행 주요 지표\*를 기반으로, 투·융자 과정에 담보 또는 성과지표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및 관련 사업\*\* 추진 노동부, 행안부
    - \* SVI(Social Value Index) 고용노동부 / SPC(Social Progress Credit) 사회적가치연구원(SK그룹)
    - \*\* (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 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화폐적 보상('26, 50억원)
    - ※ 사회성과보상 확대를 위한 제도 도입 추진 (사회성과보상사업법 제정안, 최혁진·민형배 발의 '25.12)
  - **(공제 사업 활성화)** 인가기준 및 운영지침 마련, 리스크 관리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계획 수립 및 교육 컨설팅 제공 행안부, 기획처, 공정위
  - **(사회연대금융 DB 확대)** 부처 등 인증기관이 보유한 사연경 기업 관련 정보를 신용정보원이 받아서 금융기관에 제공하는 **DB항목\* 확대** 금융위
    - \* 사회연대경제기업 성과 지표 등 금융지원에 활용 가능한 정보 항목 추가 구축 추진

## < ② 투·융자 및 지원 확대 >

- **(정부)** 정책금융, 임팩트펀드, 보증 등 직접 지원 강화 중기부, 금융위
  - **(정책금융)** 사회연대경제기업 대상 중소기업 정책자금 및 소상공인 전용자금 지속 지원\*, 서민금융진흥원 대출 확대\*\*
    - \* (소상공인) '18~'25년 462억원 → '26년 200억원 / (중소기업) '18~'25년 7,127억원 → '26년 800억원
    - \*\* 사업수행기관 추가선정, 현재 60억 수준 자금공급규모를 150억으로 확대
  - **(임팩트펀드·팁스\*)** 소셜벤처 등 사회적 가치 창출 기업 투자 펀드 조성('26년 333억원), 사연경 기업을 우선 선발하는 팁스 부문 신설
    - \* 팁스(TIPS,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 민간 운영사가 선투자한 기업에 매칭 지원
  - **(보증)** 신용보증기금 개별 보증 한도 상향\* 및 보증 공급 규모 확대 ('25년 2,500억원 → '30년 3,500억원), 소셜벤처 임팩트보증 확대('26~'30년, 7,500억원)
    - \* (사회적기업·협동조합) 5억원 → 7억원, (마을·자활기업) 3억원 → 5억원
- **(은행권)** 대출 지속 확대, 지역에서 금융기관의 자금공급 유인 강화 금융위
  - **(대출)** 은행권 신규대출실적 점검·독려('26~'28년 4.3조원, '23~'25년比 +18.3%)

- (지역재투자 활성화) 사연경 조직에 대한 금융 공급 실적의 지역재투자 평가 배점 확대
- (상호금융) 상호금융이 지역공동체성에 근거한 본연의 기능을 수행 하도록 대출·출자 확대 등 지속적 자금 공급 기반 마련
  - (새마을금고) 기금 또는 전용상품을 통한 대출 공급 확대(26~30년 2,000억원), 햇빛소득마을 조성 시 직접 출자 또는 관련 대출 추진 행안부
  - (신협) 타 상호금융\*과 같이 개별 신협이 타 법인에 출자할 수 있도록 「신용협동조합법」 개정 추진 금융위

\* 농협·수협·산림조합(자기자본 內)·새마을금고(정관)는 사업 수행을 위해 타 법인에 출자 가능

## 2 단계별 성장 지원

- (창업지원) 창업 지원 사업 개편·복원 및 창업 교육, 초기 사업화 자금, 선배 기업 연계 등을 통한 창업 기반 강화
    - (예비창업) 모두의창업 프로젝트를 통해 사연경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창업자 대상 사업화 자금(최대 1억), 창업멘토링 등 지원(27~) 중기부
    - (초기창업패키지) 창업 3년 미만 기업 대상, 사업화 자금(최대1억) 지원 및 창업프로그램(시제품 제작, 시장진입, 투자유치 등) 운영(27~) 중기부
    - (사회적기업) 유형별(초기창업형, 인증전환형, 재도전형) 맞춤형 창업 지원 및 투자·판로 연계 등 후속 지원 강화 노동부
    - (자활기업) 초기 창업자금 지원, 창업 교육(재무, 회계 등 현장 수요 중심 개편) 및 선배 기업 연계 컨설팅 등을 통한 창업 역량 강화 복지부
  - (유형별 성장지원) 사연경 기업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경영 역량 강화 및 사업모델 고도화 추진
    - (사회적기업) 성장 단계별 맞춤형 스텝업 지원사업 확대 노동부
- ※ (디딤돌) 인사·노무·회계 등 기초 경영지원(1,100개社), (도약기) R&D, 마케팅 등 사업 모델 고도화(100개社), (성숙기) 협업 프로젝트 통한 규모화 지원(5개 프로젝트)

- **(자활기업) 신규 사업모델\* 개발 및 브랜드화를 통한 사업 고도화 지원** 복지부
  - \* 노동집약 중심(간병, 집수리, 청소 등) → 다변화(임대주택 관리, 친환경 용기 세척 등)
- **(마을기업) 성장 단계별 지원 및 인센티브\*를 통한 우수 마을기업\*\* 육성** 행안부
  - \* 신규(최대 5천만원) → 재지정(최대 3천) → 고도화(최대 2천)
  - \*\* 우수기업(우수/모두애) 발굴 및 제품개발, 홍보·마케팅 지원 등을 통해 간판 마을기업 육성
- **(협동조합) 연합회 중심 생애주기별 맞춤형 컨설팅 지원 확대** 기획처
  - ※ 진입 (창업준비, '27~) → 도약 (회계 등 경영지원) → 고도화 (투자 유치, R&D 등)

### ■ 분야별 협동조합 활성화 ■

- ▶ **(마을관리) 도시재생사업지역(누적 595개소, '13~)의 유지·관리를 위한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304개소, '25년 기준) 자생력 강화 및 운영 고도화 지원** 국토부
  - 실태조사('26)를 거쳐 종합 개선방안(수익성 개선, 시설운영 활성화 등) 마련, 조합 컨설팅 및 활성화 지원(지역사회 서비스 참여 확대, 판로 지원 등) 확대
- ▶ **(교복) 교복 공급 주체 다변화(협동조합·소상공인)를 통한 교복비 안정화** 교육부
  - 사회적 가치,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교복 입찰 평가요소에 반영하여 협동조합의 참여 활성화(조례 및 운영지침 개정('26. 上~))
- ▶ **(생협)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3개년 발전계획 수립('27~'29)** 중기부
  - 소비자 생협 지원 방안 및 제도개선 과제 발굴, 실태조사 수행 및 발전계획 수립
- ▶ **(과학기술) 과학기술인협동조합의 자생력·전문성 제고를 위해 제품·서비스 사업화, 교육·컨설팅, 홍보 등 지원** 과기부

- **(스케일업) 사회연대경제기업 성장 고도화 지원** 중기부
  - **(지원구조) 성장 보육 역량과 사회적 가치 증진 지원 역량을 모두 보유한 민간기관(컨소시엄 형태 등)이 유망 조직을 선별·육성**
  - **(지원내용) 보육·컨설팅 → 사업화 자금 → 후속지원\***
    - \* 경영 성과, 사회적가치 등을 평가하여 자금·판로·수출 등 연계 후속지원 추진
    - ※ 「성장형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26.下)
- **(취업지원) 고용 연계를 통해 사회연대경제 분야 진입 지원**
  - **(취약계층) 취약계층을 신규 고용·유지(6개월 이상)하는 (예비) 사회적 기업 대상 인건비 지원 사업 복원 및 사회적가치\* 중심 개편** 노동부
    - \* 사회적가치(SVI) 성과가 높은 기업에 지원 수준 및 기간 우대(기본 2년+1년) 지원

- (여성) 새일센터(전국 159개소)를 통해 경력보유여성과 사연경 기업 간 맞춤형 일자리 연계 **성평등부**

※ 구직자의 희망 직종, 연령 등과 기업의 규모, 임금, 근로조건 등을 종합 고려하여 연계

- (지방정부 정책 지원) 지방소멸대응기금(매년 1조 규모)을 활용하여 지방정부의 사연경 정책 활성화 및 사연경 조직 육성 지원

- 기금 배분 과정에서 사연경 조직 참여 여부를 평가에 반영\*하고, 기초 단위 사연경 조직 육성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예시) 기금 사업자가 사연경 조직이거나, 사연경 조직과 협력하여 추진시 우대하고,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햇빛 소득마을 지원 등 사업 포함시 별도 가점 부여

### 3 판로 확대

#### < 1 공공서비스 위탁 확대 > **행안부**

◆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에 공공서비스 집행 위탁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것 (‘26.4.6. 제14회 국무회의 중)

- (추진방향)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연경 기업이 민간 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공공서비스 부문에서의 위탁 확대 방안 마련

- (법·제도◆) 공공서비스 위탁 우선고려 법적 근거를 마련(기본법)하고, 지자체 참고 조례 등을 통해 확산 유도

※ 국가와 지자체는 공공서비스 제공 업무의 일부를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 사회연대 경제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기본법(안) §20)

- (사례조사) 위탁 전수조사를 통해 위탁 적합 분야(보건복지(돌봄 등), 환경(청소) 등)와 방식(참가자격 제한, 가점부여, 참가 자격 명시 등)을 발굴

#### < 지방정부 민간위탁 전수 조사 (26.4.27.~5.8.) 결과 >

- 전체 민간위탁 17,182건 중, 사회연대경제기업 대상 위탁은 868건(5.1%)
  - (기업유형) 사회적협동조합(64%), 사회적기업(17%), 일반협동조합(12%) 등
  - (분야) 보건복지(53%), 경제(12%), 문화(8%), 환경(7%) 등 분야에 주로 위탁
  - (방식) 자격명시(10%), 수의계약(3%), 자격제한(2%), 가점(1%), 그 외 일반경쟁(84%)

- **(가이드 제공)** 위탁 우선고려의 법적 근거, 우수 위탁사례의 운영 방식 등이 포함된 가이드를 제공하여 지방정부의 참여 유도
- **(계획반영)** 중앙·지방 기본계획 수립 시 위탁 활성화 방안 포함
- **(교육)** 중앙·지방정부·중간지원조직 담당자 대상 민간위탁, 공공조달 및 우선구매 관련 실무 교육과정 운영
- **(인센티브)** 지방정부 평가 등에 위탁 관련 지표 신설을 검토하고, 우수 지방정부에 특별교부세를 부여하는 등 사례 확산 유도
- **(공공기관)** 구내식당 등 운영시 협동조합 등의 입찰 참여가 확대 될 수 있도록 기준 마련(기관별 구내식당 위탁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

**< 지방정부 공공서비스 위탁 주요 사례 >**

분야	사례	내용
환경(청소)	시흥시 가로청소 위탁	▶ 가로청소 위탁 공모 시 신청 자격을 시흥시 소재 사회적기업,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제한
돌봄	오산시 어린이집 운영	▶ 사회적협동조합 전환을 조건으로 신규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 운영자 모집, 협동조합 전환을 위한 교육·컨설팅 등 지원
시설 관리	완주군 생활문화센터 운영	▶ 적격자 선정 평가 시 사회적가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정성평가 배점 내 지역사회 상생협력 계획을 평가항목으로 포함

**< ② 공공구매 활성화 >**

- **(우선구매)** 중앙·지방정부, 공공기관의 사연경 제품 구매 활성화를 위한 의무구매제도 도입 및 구매 기준 정비 등 제도 개선 추진
  - **(의무구매제도◆)** 중앙·지방정부 및 공공기관에 대해, 구매 목표율에 따른 '사연경 제품 구매계획' 수립 및 실적 제출을 의무화 행안부, 중기부
    - ※ 구매계획 개선 필요시 개선 권고 및 구매실적이 미비한 경우 개선조치 요구 가능
  - **(기준정비)** 사회적기업 등 우선구매율 산식 정비 추진 노동부
    - ※ 우선구매 기준 산식에 공사 포함 여부 등 개선방안 검토(~'26. 下)

- **(계약상 우대)** 계약법령상 우대 확대를 통한 공공시장 접근성 제고
  - **(수의계약)** 기업 유형별 특성(사회적가치 창출 방식 등)을 고려하여 국가·지방 계약법령상 수의계약\* 제도 정비방안 마련 관계부처
    - \* 현행 법령상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은 기업 유형과 관계 없이 '취약계층 30% 이상 고용' 시에만 1억 이하 수의계약 가능
  - **(입찰보증금)** 지방 계약시 사회연대경제기업 입찰보증금 면제\* 확대 행안부
    - \* (현행) 농·수협 등 일부 협동조합에만 입찰보증금 면제(5%)
    - (개선)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자활기업도 면제대상 포함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 ※ (예시) 3억원 입찰 참여시, 입찰보증금 1천5백만원(5%) 납부 부담 감소
  - **(계약 우대)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평가시 우대 확대** 조달청
    - ※ 마을·자활기업도 우대 대상에 포함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 규정 개정, 26.1)
- **(운영개선)** 사연경 제품 등록 확대, 전용몰 구축 등 종합쇼핑몰을 통한 판로 강화 및 사연경 통합 공공구매 플랫폼 구축 조달청, 노동부
  - **(종합쇼핑몰 진입)**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 지원(단가계약 가능 서비스 상품\* 발굴) 및 등록 요건 완화\*\*를 통해 공공조달 참여 확대
    - \* (예시) 건물 청소 서비스(4월 기 공고), 에어컨 세척 서비스 등 수의계약 우대 규모 (5천만원 이하) 중심 서비스 발굴
    - \*\* 사연경 조직에 대해서는 실적 요건 면제 및 적용대상 확대(마을·자활기업 포함) (용역·상용 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개정, '26.下)
  - **(플랫폼 개편)** 사회적가치 조달 플랫폼(가치장터) 입점기업을 마을기업 등으로 확대하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내 '전용몰' 신설
- **(역량강화)** 기업의 공공구매 참여 역량 강화 및 담당 공무원 교육 실시
  - **(기업)** 조달청 역량개발원에 사회연대경제기업 대상 전문교육과정 신설 및 나라장터엑스포\*에 사회연대경제기업 전용관 신설 조달청
    - \* '26년 엑스포 행사(652개사 참석, 약 16,000명 방문)시 전용관에 8개 기업 참가
  - **(공무원)** 지방 계약 담당자 교육·워크숍 등을 통해 우대 제도 활용 안내 행안부

### < ③ 민간판로 확대 >

- **(유통채널 확대)** 소비촉진 행사(코리아그랜드페스티벌 등) 참여 및 대규모 유통채널을 통해 시장 확대 행안부·노동부·농식품부·해수부
- **(민간채널 활용)** 온오프라인 쇼핑몰 기획전 등을 통해 판매 확대 지원
  - \* 서울 지하철 역사 및 우체국 쇼핑몰, 11번가, 지마켓, GS홈쇼핑 등에서 기획전 진행
- **(농수협)** 농협 하나로마트 입점 가점(2점) 부여, 로컬푸드 직매장(25년 738개소)을 통해 판매처 제공, 농수협 공영홈쇼핑 입점 지원
- **(전문 유통 연계)** 소셜벤더\*를 활용하여, 경쟁력 있는 제품을 발굴하고, 상품개선부터 유통채널 입점까지 원스톱 맞춤형 판로개척 지원 노동부
- \* 소셜벤더(Social Vendor): 사회연대경제기업 역량강화, 상품발굴, 유통채널 입점연계 및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판로개척 활동을 수행하는 유통 전문조직(26년 8개소 운영)
- **(기업 연계)** 기업 ESG, 사회공헌 등 연계를 통한 성장 기반 강화
- **(ESG 연계)** 대기업 ESG 수요와 연계성이 높은 사회연대경제기업을 발굴·안내하고, 매칭 시 해당 대기업에 동반성장지수 가점 부여 행안부·산업부
- **(기업 협력 확대)** 민간·공공기관과의 협력 모델을 표준화하고, 보유 자원(홍보, 경영·법률 컨설팅 등)과 연계한 협력사업\* 추진 노동부
- \* KDB 산은, 하나금융, 신세계 등 '25년 63개소 공공·민간기관 74개 사업 협력

## 4 지원 제도 확충

### < ① 세제 및 국공유재산 사용 지원 >

- **(세제)** 초기정착 지원, 조세부담능력, 지역발전 기여도 등을 종합 고려하여 사회적협동조합·마을기업 등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등 감면 지원 행안부
  - ※ 현재 사회적기업, 조합법인(농협 등)에 대해 취득세·재산세 감면 중
- **(국유재산)** 국유재산 사용 접근성 향상을 위해 제한경쟁입찰 허용, 국유재산 사용료(대부료) 추가 감면(요율 : 2.5%→1%) 등 지원 강화 재경부
  - ※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26. 上)

- **(공유재산)** 사연경 기업 수의계약 요건(취약계층 고용비율 30% 이상) **완화** 및 **사용료(대부료) 추가 감면 검토**(감면율 : 50%→ 50~80%) **행안부**

### < ② 지역 제도 기반 지원 >

- **(고향사랑기부)** 답례품 선정 시 사연경 기업 생산품 반영 독려(지침 등), **고향사랑e음 내 전담몰 신설 및 지정기부\* 연계사업 추진** **행안부**  
\* 지정기부 사업 발굴시 사연경 조직,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권고
- **(지역사랑상품권)** 사연경 기업의 공익성을 고려, 연 매출액 기준의 탄력적 적용 등 관련 법령상 종합적 지원 방향 검토 **행안부**
- **(농어촌기본소득)** 농촌 내 다양한 생활서비스(생필품 판매, 교육, 돌봄, 교통 등)를 제공하는 사연경 조직을 기본소득 사용처에 포함 **농식품부**  
※ 17개 지역(경기 연천 등) 주민에게 월 15만원 기본소득 지급 시범사업 추진('26~'27)
- **(지역관광)** 기초지자체 대상 **관광활동가**(관광두레PD)를 선발하고 **주민사업체\***를 발굴·육성하여 관광을 통한 지역 소득 및 일자리 창출 **문체부**  
\* 현재 50개 기초지자체 대상, 158개소 주민사업체 육성지원 중('26.3월 기준)
- **(문화복지)** 취약계층 대상 **바우처**(통합문화이용권, 스포츠강좌이용권 등) 사용처에 사연경 조직 참여를 확대하여 서비스 수요 확대 **문체부**

### < ③ AI 활용 지원 > **행안부**

- **(현장 밀착형 공공AX 지원)** 사연경 조직이 AI를 통해 지역이 직면한 복합적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사회 서비스를 혁신하도록 지원  
- 지방정부-사연경 조직-AI기업 간 협력 체계\*를 통해 지역 맞춤형 AI 기반 혁신모델을 발굴·도입하여 지역 활력 제고 및 주민 편익 증진  
\* **(주체별 역할)** 지방정부(과제 선택발굴) / 사연경 조직(AI 서비스 운영) / AI 기업(기술 개발교육)

#### < 과제 예시 >

- ▶ **AI 돌봄 지원** : (매칭) AI가 돌봄 대상자의 거주지, 특이사항 등을 분석하여 대상자 맞춤형 요양보호사 자동 배정 → (지원) 사연경 조직이 방문 일지 등 작성시 AI 지원
- ▶ **AI 자원 상생** : (매칭) 사연경 조직이 보유한 유휴 장비(트럭 등) 및 공간 자원을 AI 기반으로 실시간 매칭 → (전달) 사연경 조직이 해당 자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

## 5 해외 진출 지원 및 국제 협력 강화

- **(수출지원)** 수출기업화를 위한 해외 마케팅 및 수출 지원 **산업부**
  - **(수출 상담회·전시회)** KOTRA 대표 해외 마케팅 행사와 연계하여 해외 진출 및 투자유치 지원
    - ※ (수출) 북업코리아 사회적경제기업관 운영 등, (투자유치) K Connect AI<sup>가칭</sup>, Invest KOREA Summit 참가 등 (‘26)
  - **(해외진출 서비스 우대)** 해외 시장조사, 전시회 등 신청시 가점 적용, 참가비 및 이용 수수료 할인\* 지원
    - \* 서울푸드(참가비 5% 할인), 수출24 글로벌 대행 서비스(유료조사 비용 20% 할인), 해외진출 한국기업 디렉토리(구매가격 5% 할인) 등 할인지원(‘26)
- **(ODA(국제개발협력) 지원)** ODA 사업 참여 확대를 위한 기반 마련 **외교부**
  - **(협력모델)** 기업·시민사회가 공동협력 컨소시엄 형태로 KOICA ODA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제도 기반을 마련하여 사연경 기업의 참여 기회 확대
    - ※ K-Impact 협의체(소셜벤처 등 참여), 기업-NGO 매칭데이 등을 통해 협업 지원
  - **(참여 기반 확대)** 사연경 기업의 KOICA IBS\* 사업, 개도국 취약계층 소득증대 사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역량 교육(제안서 작성 등) 실시, 별도 사회적가치 지표 개발(~‘27)
    - \* 기업과 KOICA가 재원을 분담하여 개도국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으로, 사연경 기업 참여시 기업 분담금 비율을 하향 조정(20%)하여 진입 부담 경감 중
- **(국제 협력)** 국제기구 및 사연경 추진국과 교류, 네트워크 구축 **행안부**
  - **(국제기구)** ILO 내 사연경 국가 간 협의체(우호그룹, Group of Friends) 가입 추진 및 OECD 글로벌 규범 프로그램 공조 등 교류
  - **(해외 민관교류)** GSEF\* 등 국제 민관 기구와 교류 및 포럼 등 참여를 통해 해외 사연경 정책 대응 강화 및 상호협력체계 구축
    - \* 전세계 지방정부와 사연경 조직, 기업 등이 협력하여 지역 문제 해결과 사연경 발전 등을 추진하는 국제민관협력플랫폼 / '29년 제8회 GSEF 포럼 한국 유치 추진 계획

## 2

# 지역 혁신 생태계 조성

◆ 지역 기반의 사회연대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혁신 모델 발굴, 지역 내 네트워크 구축, 전문 인재 양성 및 국민 참여 확산**을 종합적으로 추진

구분	현재 : 지역 생태계 취약	➔	개선 : 지역 협력체계 구축
협력체계	지역 내 주체간 협력 미흡		혁신모델을 통한 협력 모델 발굴 및 지역 내 협력 네트워크 강화
청년인재	전문 인력 양성 체계 부족		대학 교과·일경험 등을 통해 청년 전문 인재 양성 체계화
국민 참여	국민 참여 기회 부족		기부 및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해 연대·협력 문화 확산

### 1 혁신모델 발굴 및 확산

○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사업)** 지역사회문제를 사회연대경제 방식으로 해결하는 **혁신모델\*** 발굴 및 전국 확산(26, 85억) 행안부

\* ①지역순환경제 구축형, ②공공서비스 혁신형, ③생활서비스 제공형, ④지역활성화 선도형, ⑤지역공동체 강화형, ⑥지역자율 선택형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한 6대 유형

- **기업 사회공헌\*** 등 연계를 통해 **혁신모델 고도화·규모화** 지원

\* 신한금융그룹-행안부 협업, 「사회연대경제 임팩트업 프로젝트」 신규 추진(26년~) 등

구분	기존 부처별 사업	⇒	혁신모델
목표	개별 기업 중심 육성	⇒	다양한 조직 간 연대·협력 → 생태계 구축
주체	부처별 진흥정책 추진	⇒	다부처·다분야 연계
효과	기업 성장지원	⇒	지속가능한 경제 모델 구축 ※ 공공구매, 사회연대금융 연계 등

#### < 주요 선정 사례 >

- **(어르신 통합급식·돌봄 모델, 충남 아산)** 지역 먹거리(로컬푸드)와 식품 대기업(R&D 등), 사연경 조직(가공·배달, 돌봄) 연계를 통해 지역 내 어르신 통합급식·돌봄 제공
- **(잉여농산물 활용 미식관광모델, 제주)** 사연경조직의 농산물 가공 경험과 관광업계(호텔 등), 소상공인 등을 연계하여, 잉여농산물을 활용한 고부가가치(미식 관광) 창출

- **(사회적기업 협력 모델)** 노동통합·통합돌봄 등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정부·민간기관·사회적기업 등 주체가 협력하는 모델 구축(26, 137억) 노동부
  - ※ (예시) 지역 특화 돌봄 패키지 운영(영양관리, 건강, 주거 관리 등) - 돌봄 서비스 고도화(노인 특화 서비스 개발 등) - 민관 거버넌스 구축·운영
- **(협동조합 협력 모델)** 중앙-지방-협동조합이 협력하여 돌봄, 주거, 의료 등 지역현안에 대한 공동 과제 발굴 및 해결방안 모색 지원 기획처
  - ※ (예시) 발달장애인의 돌봄·자립을 위해 중앙-지방정부-협동조합 간 일상돌봄, 방과후 교육, 문화예술 지원, 일자리 연계 방안 모색

## 2 차세대 사회연대경제 리더 양성

- **(일경험)** 청년이 사연경 기업에서 일경험\* 및 직무 역량 강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사연경 직업 경로 마련 행안부, 노동부
  - ※ 미취업 청년 총 2,500명 대상, 청년 참여 수당, 기업 멘토수당 등 지급
  - \* (예시) (돌봄) 주거건강관리 프로그램 기획운영 지원 / (마케팅홍보) 마을기업 상품 판로개척 지원 등
- **(청년마을)** 청년이 지역의 다양한 문제를 직접 발굴·해결하며 지역의 사회연대경제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민간·공공 자원 연계지원 강화 행안부

- [예시] 익산 청년마을 : 목공전문가가 모인 익산 청년마을은 새마을금고 지원을 바탕으로 집수리봉사단 교육·운영 및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 활동 등 지역문제 해결 사업 추진
- **(청년마을기업)** 마을기업에 청년이 참여하여 유·무형의 지역자원을 활용한 소득·일자리 창출로 지역 활성화 및 지역문제 해결에 기여 행안부
  - ※ 청년마을기업 : 청년 회원 비율 50% 이상 마을기업으로, 마을기업 지정시 지역 주민비율 완화(70→50%) 및 자부담 경감(20%→10%) 등 혜택

- [예시] (주)청년 이름 : 지역자원을 활용한 관광 체험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으로 고립·은둔 청년의 일상 회복 지원 및 지역 활성화 도모

○ **(대학 교육)** 대학 교과·직업교육 연계 및 현장 경험을 통해 사연경 교육 확대 및 임팩트 분야 경영자 등 전문 인재 양성 행안부·교육부

- **(교과 연계)** 대학 내 관련 교과 운영시 사회연대경제 관련 내용 포함 및 관련 융합전공·소규모 학위(마이크로디그리) 운영 권장·안내

- **(인재 육성)**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ᄇRISE))와 연계하여 지역 수요를 발굴하고 경진대회 개최, 창업교육·멘토링 및 동아리 연계 프로젝트 등을 지원

▪ [예시] RISE 로컬 창업캠프 (충남, '25) : 충청RISE센터, 충남로컬창업교육협의회, 충남 지역 청년마을이 공동 캠프를 개최하여 지역문제 해결형 창업 아이템 발굴 및 멘토링 지원

- **(직업 교육)** 학위·비학위 과정 연계를 통해 사연경 조직 재직자 및 취업 준비생·전직 희망자 대상 직무 전문성 강화 및 역량 개발 교육 기회 확대

※ (예시) (재직자) 직무역량 향상 / (취업 준비생·전직 희망자) 사연경 분야 진입을 위한 직업훈련

- **(현장 경험)** '대학·기업·현장' 협업 기반 프로젝트 및 현장실습 참여 기회 제공을 통해 사연경 분야 실무역량 습득과 경력 형성 지원

▪ [예시] 성균관대학교(로컬프러너십 인증제도) : 경영대학 내 도전학기(비교과)와 경북 의성 청년마을(사회적협동조합 멘토리)을 연계하여 지역문제해결 프로젝트 수행

### 3 지역협력 네트워크 구축

○ **(협력·소통체계 구축)** 정부와 사연경조직, 중간지원조직 간 상시 협력 및 소통 체계를 구축하여 정보 공유와 협업 기반 강화 행안부

- **(지역 협의체)** 지방정부와 사연경 조직, 유관기관(중간지원조직 등)이 참여 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정보 공유, 사업 연계, 공동사업 발굴 등 추진

- **(현장 간담회)** 권역별·대상별(청년·시니어 등) 간담회 등을 통해 기업간 교류 및 네트워크 기회를 확대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

※ 청년(23명)·시니어(21명) 기업가 간담회, 권역별 지역청년 활동가 간담회(7회, 총 113명) 등 추진

- **(광역단위 민관협력체계)** 공공기관, 기업(ESG), 대학 등 다분야 거버넌스 구축으로 자원을 발굴·매칭하여 지역문제해결 추진·확산(‘26, 21.5억) 행안부
  - ※ 민·관·공·산·학 거버넌스 구축 및 의제 발굴 → 자원 연계 및 실증 지원 → 성과 확산
- **(기초단위 지역역량성장거점)** 다양한 부처 사업으로 기 조성된 공간을 현장 기반 정책랩, 생활권 중심 다부처사업 연계 거점으로 활성화(‘26, 16.5억) 행안부

- [예시] 제민천 마이스타운(충남 공주 제민천 일대) : 각 부처(환경부·국토부·문체부 등) 에서 개별적으로 유관 사업 추진 → ‘마이스 타운(수평호텔) 컨셉트의 지역브랜딩으로 재편
  - ※ 생활권 곳곳에서, 숙박·식사·업무·회의·여가 등 → 유동인구 1년 새, 123% 증가
- **(조직 기반 협력) 협동조합 연합회 조직 등을 통한 신규 조직 육성·교육 강화, 업종·지역별 거점조직을 중심으로 중앙·지방 등과 협력 사업 수행** 기획처
  - ※ 시범사업(3개 내외) 운영(‘26) 후 성과점검 및 표준모델 정립, 전국 확산(~’28)

## 4 국민 참여 및 인식 확산

### < ① 국민 참여 확대 > 행안부

- **(기부·봉사) 기부 및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해 연대·협력 기반 확충
  - **(기부) 기부금품 규제 합리화**를 위한 「기부금품법」 전면 개정\* 및 공공부문이 선도하는 소액 기부\*\* 활성화 추진
    - \* 모집등록 대상·요건, 총당비율, 형벌 등 규제 혁신 및 기부단체 정보공개 강화
    - \*\* 공적 항공마일리지, 포인트, 낙전 등 기부 선도 및 민간 기부플랫폼 연계 등
  - **(자원봉사) 민간 주도 자원봉사센터·지역자원봉사진흥위원회 운영\*** 및 가칭 새마을공동체봉사단(K-Corps)\*\* 신설
    - \* 자원봉사센터(246개) 중 지방정부 직영(110개) 폐지, 전 지방정부(243개)에 지역 자원봉사진흥위 설치·운영 등 (「자원봉사법」 전부개정, ‘26.4.23. 국회 통과)
    - \*\* 돌봄, 환경 등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봉사단 활동 지원

- **(주민자치회)** 사연경 조직-주민자치회 연계법인 설립을 통해 지역문제 해결
  - 참고조례 개정안(26.6. 배포)에 '주민자치회 연계 법인\* 설립' 규정 신설
    - \*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 [예시] '함께하는 장곡' 사회적협동조합 (충남 홍성군) : 주민자치회 의견을 수렴하여 사회적협동조합 창립, ▲건강한 밥상 나눔, ▲함께 타는 장곡 효도 택시 쿠폰 발급, ▲어르신 마음건강 상담 지원, ▲행복나눔 공동빨래방 운영 등 활동 진행

## < ② 생애주기 교육 >

- **(초중등 교육)** 교육과정과 연계한 사회연대경제 교육 확대 및 체험 활동 등을 통해 학생들의 사회연대경제 이해 및 참여 기회 제공
  - **(교육과정) 학교 창의적 체험 활동\***, **경제·금융·노동 연구학교\*\*** 등과 연계하여, 사회연대경제 교육 확대 및 체험 프로그램 등 운영 교육부 등

\* [예시] 화성시 '청소년 소셜벤처 교육' : 장·단기과정(1~8회) 및 관내 기업가 특강 등을 통해 사회연대경제 가치 학습, 제품서비스 체험 등 (21개교, 1,314명 대상 교육 실시(26 1학기))

\*\* 경제(노동)·금융교육 수업모델 개발시 사회연대경제 관련 내용을 포함

- **(청소년 교육) 방과후 돌봄**(방과후아카데미, 전국 355개소) 이용 청소년(초4~중3) 대상('25년 기준 14,895명) 사연경 교육·활동 프로그램 운영 성평등부
- **(학교 협동조합) 학교 사회적협동조합**('26년 183개) 지원\*을 통해 학생, 학부모, 교직원, 주민의 사회연대경제 활동 활성화 교육부

\* (교육부, 시·도 교육청) 학교 사협 프로그램 운영 및 컨설팅 지원, 사업모델 개발 지원, 학교 협동조합 우수사례 공모, 상장 수여 및 전국 확산

▪ [예시] 예다음학교협동조합(세종 예술고) : 지역사회 공연, 인근 학교 교가 제작, 디자인 상품 제작·판매, 영상제작 등으로 얻은 수입을 지역사회 기부 등에 사용

- **(평생 교육)** K-MOOC, 지자체·민간 협력 등을 통해 성인 대상 교육 확대
  - (K-MOOC) 부처협업형, 토크 콘서트형 강좌 등 경제·금융 분야 온라인 공개강좌 개발 추진 교육부

- (지역기반 평생학습) 지자체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사회연대경제 특화 프로그램\* 확대 및 우수사례 공유를 통한 지역 확산 유도 **교육부**

\* 우리동네 사회적기업 탐방, 업사이클링(폐자재활용) 공방, 우리마을 공유경제 프로그램 등

▪ [예시] 공기밥공공과 기업이 밥이 되는 프로젝트 (광주 동구) - 지역 명인·명장 및 협동조합과 연계하여 공예재봉 천연염색 초콜릿 제작 등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지역 특화 상품 개발 추진

### < ③ 공무원 인식·역량 강화 > **행안부**

- (맞춤 교육) 중앙·지방 공무원 대상별·수준별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기본교육 신규 임용자·5급 승진자, 장기과정 고위과정·고급과정·중견리더·글로벌리더·여성리더, 시책교육 사회연대경제 업무 담당자, 단체장·의회 의원 대상 교육 등
- (교육 개발)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등을 활용한 교육교재 및 교육콘텐츠\* 개발, 온라인 플랫폼(나라배움터) 활용 확산
- \* (형태) 강의·대담 영상, AI융합·인포그래픽·모션그래픽, 사례 활용 웹툰·일러스트 방식
- (교육 확대) 중앙·시도 인재개발원, 부처·시도별 교육원, 관계기관 및 시도 지원센터 등 거점 공간을 활용한 공공부문 종사자 교육 추진·확대
- (현장 연계) 관계부처·지방공무원 대상 사연경 현장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일경험 및 중앙-지방 간 소통·교류 기회 제공
- ※ (예시) 복지부→ 통합돌봄, 국토부→ 사회주택, 농림부→ 농어촌 공동체 등 유관 현장 배치

### < ④ 국민 공감대 확산 > **행안부**

- (박람회) 사회연대경제 박람회 및 국제컨퍼런스 개최를 통해 조직 간 네트워크 기회 마련, 전국 우수 사례·성과 확산 및 국민 인식 제고 (26.下)
- ※ 정책 포럼, 판로·자금 등 컨설팅, 판매·참여·전시관 등 운영 및 유공자 포상 등
- (홍보 확대) 디지털콘텐츠(숏폼, 웹툰, AI 영상 등), 참여형 홍보(홍보 대사·서포터즈, 아이디어 경진대회 개최 등) 등을 통해 대국민 인식 확산

### 3 제도 및 인프라 혁신

◆ 부처별로 분산되어 운영되던 사회연대경제 정책의 법제도 기반을 마련하고, 범정부적 정책 협력 및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여 정책의 연계성 제고

구분	현재 : 부처별 분산된 제도	개선 : 제도·인프라 통합
법적기반	개별법 중심 지원으로 정책 범위·체계가 분절적으로 운영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으로 공통 법적 기반 마련
추진체계	부처별 사회연대경제 정책 연계 미흡	행안부 중심 범정부협의체를 통해 분산된 정책을 연계하여 추진·관리 * 기본법 시행 이후 '위원회' 설치
성과관리	각종 정부·공공기관 평가에 관련 지표가 미비하거나 부재	합동평가 등 각종 평가에 사연경 관련 지표 개편 및 신설
정보접근성	조직별 통계, 지원 정책 등 정보가 분산되어 접근 불편	통합 플랫폼 구축으로 원스톱 정보 제공
데이터	사회연대경제 통합 통계 부재로, 조직별 통계가 분산되어 관리	통합 통계관리 체계 구축 및 실태조사 정례화

#### 1 법·제도 기반 강화 행안부

- (기본법◆)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을 통해 부처별로 분절된 정책을 연계·통합하는 추진체계 확립
  - (개념 및 범위) 사회연대경제의 정의, 조직 범위, 기본 원칙 등 기본 사항을 규정하는 공통의 법적 토대 마련
  - (추진체계) 대통령 소속 위원회 설치, 기본·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 실적 평가 등으로 정책 간 연계·조정 강화
    - \* 국가 기본계획(5년), 부문별 시행계획(1년) 및 시도 기본·시행 계획 수립
  - (지원·육성) 사회연대금융 확대, 공공판로 지원, 교육·훈련 및 성장 지원, 통합공시 등 근거 마련
- (추진체계) 행안부 중심의 범정부협의체\* 및 민간자문단\*\* 운영(기본법 시행前),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중앙·지방) 설치(기본법 시행後)
  - \* 분야별 사연경 활성화 방안 발굴·추진, \*\* 학계, 현장전문가 등으로 구성, 자문 수행

- (성과관리) 중앙·지방정부 및 공공기관 평가에 사연경 관련 지표 개편(목표 수준 상향 등) 및 신설 추진

< 평가 지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우선구매 목표 비율 상향(현행 2% → 3% 상향 검토)</li> <li>▪ (지자체 합동평가) 우선구매 관련 지표 개선 및 사연경 관련 지표 신설 등 검토</li> <li>▪ (정부 혁신평가)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우선구매 관련 지표 반영 추진('27)</li> </ul>

※ 기본법 시행 이후, 사회연대경제발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년도 중앙 및 시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는 성과관리 체계 구축

- (조직별 제도개선) 사연경 조직별 법적 기반을 정비하고, 권익 보호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협회 설립 및 공제사업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기업간 네트워크 구축 및 지속가능성 제고

※ 협회 설립 및 공제사업 규정, 협회·공제사업 지도·감독 규정 신설 / 사회적기업육성법 개정('26.6)

- (협동조합) '총회 소집요구권 부여' 등 조합원 권익 보호 강화\* 및 '부실·지연공시에 대한 행정제재 조치 강화' 등 관리·감독 체계 개선('26.下)

\* 이사장(회)에만 부여된 '총회 소집요구권' 및 '의안제안권'을 조합원에게도 부여 / 협동조합기본법 개정

- (마을기업) 지침으로 운영('11~)되던 마을기업에 대해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행·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마을기업법령 제정('26.8. 시행)

※ 기본시행계획 수립, 마을기업 지정 및 지원(시설비 지원·용자 등), 지원기관 설치 등 근거 마련

- (소셜벤처) 별도 법 없이 벤처기업법을 통해 지원되고 있는 소셜벤처의 법적 기준확립 및 체계적 지원을 위한 소셜벤처법 제정 검토

※ 법 제정 검토 및 법률안 마련 (~'26.12)

## 2 정책 관리 체계화

### < ① 통합 관리 기반 마련 > 행안부

- **(통합플랫폼)** 부처별로 분산된 정책 정보 및 통계·데이터를 통합 관리·제공하고, 기본법에 따른 통합공시를 지원하는 정보 시스템 구축 추진
  - **(기능)** 경영공시 및 통합공시 지원, 기업 현황 데이터(사업보고서) 입력·관리, 통계 분석, 인증·지정 및 지원사업 통합 신청 기능 제공
- **(통합 통계관리)** 실태조사 등을 기반으로, 부처별 분산·관리되던 조직별 통계를 포괄하는 '사연경 통합 통계관리체계' 구축 추진
- **(실태조사◆)** 사연경 기업의 설립 및 운영 현황(고용 현황, 사업 성과 등) 등 정책 수립, 통계 관리에 활용하기 위한 실태조사 실시 추진
- **(인증제도)** 사연경 조직별 인증제도 운영의 효율성, 타당성 및 현장 접근성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 마련
  -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정책연구(~8월) → 개선방안 마련(~'27년) → 제도개선('28년~)
- **(정책센터)** 사연경 정책 전반에 대한 연구·개발을 실시하고, 성과 평가 및 통계관리 등을 지원하는 정책센터 운영
  - **(역할)** 조사·연구 및 정책 개발, 시행계획(부문별, 시도별) 추진실적 평가 지원,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관리 등 지원
  -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내 사회연대경제연구센터 자체 운영('26.5월, 3명)  
→ 기본법 시행 이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을 「사회연대경제정책센터」로 지정하여 운영
- **(경영공시◆)** 사회연대경제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연경 조직 경영공시 의무화**(기본법 시행 후 3년간 유예)
  - ※ 정관,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등 경영 정보, 사업결과 보고서, 임원 현황 등

## < ② 지방정부 추진 기반 강화 > 행안부

- **(지방정부 전담조직)** 지방정부의 기능·역할 및 신규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지방정부 전담 조직 설치 및 전담 인력 지원

※ 총 243개 중 121개(49%) 지방정부에서 담당조직(과 또는 팀) 운영, 담당인력 총725명  
- (광역) 16개 시도\*, 171명 / (기초) 105개 시군구, 554명

\* 전담부서는 3개 시도에서만 운영 중(21, 13개), 대부분 시도는 팀 단위로 축소

- **(조례지원◆)** 기본·시행계획 수립, 지원센터 설치, 구매촉진 지원 등 기본법상 지방정부의 역할 및 지원 사항을 담은 조례 제·개정 지원

※ 각 시도·시군구에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운영 중\*이나, 기본법령 제정에 따라 조례명 및 내용을 개정할 수 있도록 **참고조례 제시**

\* 총 243개 중 219개 지방정부에서 조례 운영(광역 100%, 기초 89%)

- **(인센티브)** 우수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 인센티브(특별 교부세, '26년 100억원) 지급 및 포상을 통해 우수사례 확산 및 정책 참여 유도

\* 사연경 조직을 통한 공공서비스 공급 확대, 사회연대금융(지자체 기금 등) 추진, 혁신모델(사연경 방식으로 지역 문제 해결) 추진 실적을 기준으로 선정

- **(협력체계)** 중앙지방협력회의 등 중앙-지방 협의체를 통해 지방정부와 소통·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사회연대경제 박람회 등 협업사업 추진

- **(사·도지원센터◆)** 개별 중간지원조직\*을 총괄·연계하기 위한 시도별 지원센터를 설치·운영, 지역특성을 고려한 통합적 정책 추진

\*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마을기업 지원기관, 광역·지역 자활센터 등

## V. 분야별 선도모델 창출·확산

◆ 지역 주민 수요가 높고, 생활과 밀접하며, 사회연대경제의 강점(주민참여·협력)이 가장 잘 발휘될 수 있는 **중점 분야를 선정하여 선도모델 추진**

<p><b>통합 돌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연대경제조직이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핵심 파트너로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돌봄·주거·의료 등 분절된 서비스를 대상자 중심으로 연계하여, 주민·지역 중심의 통합돌봄을 실현</b></li> </ul> </li> <li>■ (거버넌스) 통합지원협의체 등 지역 돌봄 거버넌스 참여 확대(조례, 지침 개정)</li> <li>■ (컨소시엄) 복합수요 대응을 위한 컨소시엄 모델 개발 지원</li> <li>■ (공급확충) 서비스 공백지역 중심 공급기관 확대</li> </ul>
<p><b>주거</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연대경제조직에 의한 주거 공급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주거·돌봄·교육·의료 등 서비스를 결합하는 플랫폼으로서, 주거비 절감, 공동체 활성화, 사회문제 해결을 동시에 구현하는 주거 혁신 확산</b></li> </ul> </li> <li>■ (공급확대) 특화임대주택 <small>건설형</small> 연 6,000호 공급, <small>매입형</small> 연 1,500호 공모(~'30년) 사회연대경제주체 참여형 공공지원민간임대 신규사업 공모 검토</li> <li>■ (임차인 보호 강화) 임대보증금 반환 리스크 완화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li> <li>■ (기업 지원) 운영지원센터 설치를 통한 운영기관 전문성 제고</li> </ul>
<p><b>에너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태양광 발전 수익을 주민과 지역사회에 환원하여 에너지 전환, 주민 소득 창출, 공동체 활성화를 동시에 실현</b></li> </ul> </li> <li>■ (공급확대) 연 700개 이상, '30년까지 총 3,000개 이상 햇빛소득마을 조성</li> <li>■ (입지지원) 공공용지, 유휴부지 발굴을 통한 사업 부지 확보</li> <li>■ (금융지원) 설비투자 용자, 인구감소지역 지방세 감면 등 초기부담 완화</li> </ul>
<p><b>농어촌</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어촌형 사회연대경제조직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돌봄·먹거리·시설 운영 등 생활서비스 공급과 지역자원 기반 소득 사업을 통해 농어촌 서비스 사각지대 완화와 지역활력 회복 실현</b></li> </ul> </li> <li>■ (조직육성) 농촌·어촌·산림 특화 사회연대경제조직 발굴 및 육성</li> <li>■ (서비스공급) 돌봄·먹거리·생활SOC 운영 등 주민밀착 서비스 공급 확대</li> <li>■ (사업참여) 빈집정비, 어촌 활력사업, 산림치유사업 등 참여 우대</li> <li>■ (소득창출) 농어촌 민박, 특산물 판매 등 지역자원 기반 수익모델 확산</li> </ul>

# 1 [돌봄] 사회연대경제 기반 통합돌봄 체계 구축 복지부

## 1. 현황 및 필요성

- (개요) 살던 곳에서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 전국 실시(「돌봄통합지원법」 시행(3.27.))

### 지역사회 통합돌봄 개요

- (대상자) 노쇠·장애·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 있어 복합적 지원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및 지자체장이 필요성 인정하는 사람
- (절차) 신청 → 조사·판정 → 지원계획 수립 → 서비스제공 → 모니터링
- (서비스)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돌봄(가사·식사·주거개선 등) 4개 분야 60종 서비스 연계

- (필요성) '지역·주민 기반 통합돌봄'의 실현을 위해 사연경 역할 확대 필요
  - (수요 밀착형 서비스) 사연경 조직은 복합적인 서비스 제공과 대상자 수요에 따른 신속·유연한 대응이 가능하여, 통합돌봄 서비스에 적합  
→ 사연경 조직이 통합돌봄 서비스의 주요 공급자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 수립 및 서비스 제공 전반에서 역할 확대 필요
  - (공급 기반 확충) 농어촌 등 취약 지역은 돌봄서비스 공급이 부족  
→ 지역별 돌봄 사연경 조직 현황을 파악하고 공급이 부족한 지역을 중심으로 사연경 조직 맞춤형 육성 및 역량 강화 필요



- A 의료사회적협동조합 : 사회연대경제는 방문진료, 식사 등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만큼, 서비스 제공기관 등으로서 참여가 제도화될 필요가 있음
- B 지자체(농촌) 공무원 : 농어촌 지역은 돌봄 수요는 더 많지만, 서비스 공급기관이 부족함. 민간 업체보다는 주민 중심의 사연경 조직에 의한 공급이 더 적합할 것

## 2. 추진 방안

- (거버넌스) 중앙·지방 협의체 등에 사회연대경제조직 참여 제도화
    - (중앙거버넌스) 중앙사회서비스원에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돌봄·복지·의료 분야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방안 논의, 정책과제 도출
- \* 자활기업, 의료사협 등 업종별 협동조합, 학계 등 참여(26.1.~)



## ② [주거] 사회연대경제조직에 의한 주거 공급 활성화 국토부 행안부

### 1. 현황 및 필요성

- (개요) 사회주택은 명확한 법적 정의는 없으며, 통상 사연경 조직에 의해 공급되는 임대주택을 지칭\*

\* 서울시 등 일부 조례에서 '사회경제적 약자 대상, '사회적경제주체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정의

#### 사회주택 유형

- **특화 매입임대** 및 **공공지원 민간임대** 를 통해 주거 관련 사연경 조직이 운영자 등으로 참여
  - (**특화 매입임대**) 사연경 조직이 청년·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의 수요를 포용하는 맞춤형 주택을 기획하면 공공(내 등)이 매입한 후 사연경 조직 등에 위탁하여 운영 / 72개 사업, 5,873호 선정('21~)
  - (**공공지원 민간임대**) 기금·민간(사연경 주체 등)이 출자·설립한 리츠가 주택건설 후, 임차인 협동조합이 민간지분을 인수운영 / 2개 시범사업(위스데이 별내지축, 1,030호) 운영('20~)

- (필요성) 사회주택은 주거와 돌봄·교육 등 서비스를 결합한 플랫폼으로, 주거 공공성 강화와 공동체 활성화, 돌봄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

#### < 주요 사례 > 별내 위스데이 (공공지원 민간임대형)

- 입주민들이 아파트 설계부터 커뮤니티 시설 구성, 아파트 운영 등에 참여
- 주민간 돌봄, 공동체 활동 등으로 주민들의 삶의 만족도가 높으며, 임대료 2년간 1% 상승 등 적정 주거비 실현, 입주 후 합계출산율 1.73명



- (문제점) 사회주택은 공급 비중이 낮고, 법적 근거 및 운영 관련 제도적 기반이 미비하여 안정적 확산에 한계가 있으며,
  - 건설·운영 역량을 갖춘 사업자(사연경 조직) 제한적 → 육성·지원 필요

### 2. 추진 방안

- ▶ (목표) 건설형 특화임대주택 공급 단계적 확대 ('26, 연 4,000호 → '30, 연 6,000호), 매입형 연 1,500호 공모 추진 및 공공지원민간임대 신규 공모 검토

#### < 특화 매입임대(특화임대주택) > 국토부

- (법제도) 사연경 주체의 참여 확대 및 운영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 (**참여범위 확대**) 건설형도 사연경 조직 참여를 허용(現 매입형만 가능), 운영·관리에 필요한 지원 근거 마련 등 제도개선 추진

※ 사업 근거 상향(훈령 → 공특법), 특화형 건설임대주택의 운영 주체에 사회적기업 등 민간사업자 추가, 재정지원 근거 등 공특법 개정안 既발의 ('25.2 연태영, '25.6 김우영 등)

- (책임성 강화) 특화임대주택 공급확대 및 사연경 참여확대에 따라 임대보증금 반환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관리장치 마련

※ 운영기관 반환보증보험 가입의무화(공특법 개정안 '26.2 복기왕·엄태영 발의)

- (기업 지원) 운영기관의 전문성 제고를 통한 안정적 사업수행 지원을 위해 운영지원센터 설치(공특법 개정안 '26.2 복기왕·엄태영 발의)

- 입주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모델 개발·보급 및 운영기관 대상 컨설팅, 교육, 운영메뉴얼 제공 등 상시 지원체계 구축

- (특화시설비 지원) 특화시설 건설비 지원 확대 추진 검토

※ 특화주택은 특화시설(코워킹룸, 세미나실 등) 설치로 인해 타 임대주택보다 추가 건설 사업비, 운영비 부담 발생하나, 매입형의 경우 별도 지원 없음

### < 사회연대경제주체 참여형 공공지원민간임대 > 국토부

- (제도개선) 사업 구조 보완 및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한 개선 추진

- (사업구조 보완) 임대 의무기간 이후 연장운영 여부를 포함한 사업 청산방안 마련, 최소 사업성 확보를 위한 합리적 재무모델 설계

- (참여 사업자 확대) 역량있는 신규 사업자(사회연대경제기업) 선별을 위한 지표·자격기준 수립, 참여 사연경주체의 저변 확대

- (임차인 보호 강화) 투명성·공정성 확보를 위한 조합비 관리 방안, 조합원 모집 체계 등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

- (공급 확대) 제도개선, 의견수렴(전문가 업계 등)을 거쳐 신규사업 공모 검토

### < 주민행복마을 > 행안부

- 주민행복마을\* 조성시, 주택 관리·운영 및 생활서비스(돌봄, 교육, 문화·체육 등) 제공 주체로 사회연대경제조직 참여 추진

\* 중앙정부 주도의 공공주택이 아닌,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한 지방 주도·주민 중심 공공주택으로, 일자리-주거-공동체를 연계(행안부-국토부-지방정부-공사 협업)

※ (추진일정) 대상지 예비 선정('26.下), 사업 추진('27~)

### 3 [에너지] 햇빛소득마을 설치 및 전국 확산 행안부·기후부·농식품부

#### 1. 현황 및 필요성

- (개요) 햇빛소득마을은 마을 주민들이 직접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며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마을 복지와 주민 소득으로 환원하는 에너지 자치 모델

##### 햇빛소득마을 개요

- (주체) 행정리 기반 마을총회 및 주민 70% 이상 동의를 받아 구성된 **협동조합(일반·사회적)**
- (운영) 마을공동체(마을조합)가 정관 규정, 마을총회 등 주민 동의를 얻어 의사결정
- (활용) 정관 및 주민 의사에 따라 공동체 복지, 개인배분 등 자율 활용
- (재원) 마을공동체 기금, 마을펀딩, 상호금융기관 대출·출자 등 활용

- (필요성) 마을 단위의 안정적 소득과 복지를 제공하는 동시에 재생 에너지 사용을 늘려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우수모델로 작동 가능

- [주요사례] 여주 구양리 (구양리 햇빛발전두레협동조합)  
: 마을 공동 부지(창고, 마을회관, 농지)에 설치한 태양광 수익 전액 (약 1,000만원/월)을 마을복지(공용버스, 무료급식, 문화 관람) 등에 활용



#### 2. 추진 방안

- ▶ (목표) 연 700개 이상, 2030년까지 3,000개 이상의 햇빛소득마을 조성 추진

- (추진체계) 중앙(행안부, 농식품부, 기후부)·지방정부 및 유관기관 협업체계 구축
  - (중앙) 행안부장관 소속 햇빛소득마을추진단을 설치하여 사업 총괄 지원
    - ※ 농식품부(농지저수지 등 부지 제공, 부지 적합성 검토 등), 기후부(금융 지원, 계통 연계 등) 사업 집행
  - (지방) 주민수요 및 애로사항 발굴, 인·허가 신속 처리 등 지원
  - (유관기관) 유휴부지 제공(농어촌·수자원공사), 계통 접속(한전), 금융지원(에너지공단, 농협·신협·새마을금고·수협 정책융자 창구 확대) 안전관리(전기안전공사) 등

- ReSCO\* 등록 기준에 '사회연대경제조직과의 컨소시엄 구성', '주민참여 사업 실적(지역협의회 구성 실적 등)' 가점을 신설하여 에너지 사회연대경제기업 참여 확대

\* 마을공동체가 햇빛소득마을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기술, 행정, 교육 등 사업 전주기를 지원하는 재생에너지 종합서비스기업

- **(사업운영)** 시범사업 → 지침 정비 → 전국 확산(3,000개소 이상, ~'30년)
  - **(사업시행)** 지역별 사전설명회 등 의견수렴을 통한 사업지침 정비, 사업공모 공고('26.3.), 전국 권역별설명회(~'26.5.) 후 본사업 추진('26.6.~)
    - ※ 1차선정 : 5월말까지 접수, 7월말 선정 / 2차선정 : 7월말까지 접수, 9월말 선정
- **(지원사항)** 사업 안착을 위한 다양한 행·재정 지원 제공
  - **(부지)** 공공용지(마을회관, 주차장, 창고 등), 비축농지·저수지·하천부지·댐수면(농어촌공사, 수자원공사, 지방정부) 등 가용 유휴부지 발굴
  - **(국·공유재산)** 태양광발전소 설치 시 수의계약으로 사용허가·대부 및 영구시설물 축조 가능, 사용료·대부료 감경 지원(50%)
  - **(재정·세제)** 설비 투자 용자지원\* 및 인구감소지역 내 신재생에너지 창업·사업장 신설 시 취득세 면제 및 재산세 감면(5년 100%, 3년 50%)
    - \* (기후부) 설비투자비의 85%, 이자율 2%,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26년 6,480억원)
  - **(계통연계)** 마을공동체의 에너지 자립 지원근거 및 계통 우선접속 허용(전기사업법, 분산에너지특별법 개정) 및 계통 부족지 ESS설치 지원

#### 관련 에너지 소득 마을 사업 기후부

##### ■ 바람소득마을

- **(개념)** 지역의 바람자원을 이용해 얻은 개발이익을 지역주민과 공유
- **(모델개발)** ①민관협의체 구성, ②주민투자 확대, ③이익 일부를 마을공익사업으로 활용
- **(확대방안)** 주민참여율 확대 사업에 대해 풍력발전 경쟁입찰 우대조건\* 부여, 정책금융 지원한도 확대(현 최대 80%→85%)
  - \* 예시) 기준 주민투자율 이상 시 공공입찰 참여기회 제공, 입찰평가 시 주민참여도 가점 부여

##### ■ e자립마을

- **(개념)** 가축분뇨, 하수찌꺼기 등 바이오가스 에너지를 이용하고 이익을 공동체가 공유
- **(모델개발)** 협동조합·마을공동체 참여 기반 표준모델 발굴 및 시범사업 공모(5개소)
- **(사업내실화)** 표준모델 5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적용성을 고려한 공급설비·운영시설 등 구축

#### 4 농어촌형 사회연대경제조직 육성 및 활성화 농식품부, 해수부, 산림청

### 1. 현황 및 필요성

- **(현황)** 농어촌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돌봄·생활서비스 수요는 증가하나, 거주 인구 분산과 인프라 부족으로 공급은 여전히 취약\*  
\* 10만명당 시설(전국/농촌): (소매점·편의점) 14,831개/1,831, (이미용·세탁소·목욕탕) 4,106개/31
- **(필요성)** 농어촌 생활서비스 사각지대 완화를 위해, 주민 주도의 사연경 조직을 육성하고, 관련 농어촌 사업 참여를 확대할 필요

### 2. 추진 방안

#### < 농촌 > 농식품부

- **(조직 육성)** 농촌형 사연경조직(사회적 농장, 서비스 공동체) 육성·지원

▶ (목표) ('26.3월) 192개소 → ('28) 300개소 → ('30) 500개소 농촌형 사연경조직 육성

- 서비스 공급 주체로 육성(발굴, 교육, 활동지원) 및 지방정부와의 서비스 협약\*을 통해 주민주도 서비스 공급체계 구축(협약 체결, 26.下)

\* 지방정부와 서비스 공동체가 협업하여 서비스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서비스 협약을 체결하여 농촌지역 내 가용 자원을 활용하여 지속가능한 생활서비스 제공

#### 농촌형 사회연대경제조직

- (농촌 서비스 공동체) 농촌 주민이 교육, 돌봄 등 서비스 제공을 위해 결성한 단체(협동조합 등)
- (사회적 농장) 농업활동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돌봄, 치유, 고용, 교육 등 서비스 제공

- **(사업 참여)** 사연경 조직의 서비스 공급 및 농어촌 사업 참여 확대

- (먹거리) 찾아가는 이동장터\* 및 지역먹거리 프로그램에 사연경 조직 참여를 확대하여 식품 사막 지역에 식품 판매·배달 등 서비스공급

\*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하여, 사연경조직 등이 참여하는 '찾아가는 식품 서비스' 지원(26.下~)

- [예시] 동네방네 기(氣)찬장터(전남 영암 농협) - 매일 2~3개 마을을 순회하며 달걀, 육류, 휴지 등 생필품을 판매하고, ATM기를 동반하여 기본 은행 업무 지원

- (시설 관리 위탁) 농촌 SOC 시설 운영 및 프로그램에 사회적협동조합 등 주민공동체 참여 확대(사연경 조직 참여시 가점 부여('26~))

※ (향후 목표) 사연경 조직 참여 시설 25개소('25) → 50개소 확대(~'30)

- [예시] 행복키움 사회적 협동조합(경북 의성군) - 의성키움센터(지역 보육 시설) 시설 관리, 영유아·초등학생 대상 문화·보육 프로그램 등 제공('22~)

- (지역재생사업) 농촌 빈집정비사업 및 농어촌 민박사업에 사연경 조직도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 확대 추진(빈집정비 특별법 제정, 도농교류법 개정)

※ 농촌 빈집정비 : 현행 시군, 농어촌 공사, 빈집 소유자 → 개선사회적 기업 등 참여 가능  
 농어촌 민박 : 현행 실거주 주택소유자 → 개선 빈집일 경우 사회적 기업 등 참여 가능

- [예시] 다로리 마을호텔(경북 청도군, 사회적기업((주)다로리인))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호텔, 도서관 등으로 활용, 수익 일부는 지역사회 환원



## 〈 어촌 〉<sup>해수부</sup>

- (조직 육성) 해양수산형 예비사회적기업 도입·선정 및 어촌형 사연경 조직\*의 법적 기반\*\* 마련 추진

\* (예) 어촌형 서비스 공동체, 사회적 어업 공동체 / \*\*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 개정('26)

- (사업 참여)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취약해안 폐기물 대응사업\*\* 등 사업 지침 개정을 통해, 사연경 조직의 어촌 관련 사업 참여 활성화

\* 정주여건 개선사업에 따른 시설(마을회관 등) 운영 및 서비스(돌봄, 문화 등) 공급 주체로 우선 고려(지침 개정 추진, '26)

\*\* 취약해안폐기물 수거인력 용역 계약시 사연경 조직 우대(지침 개정 완료, '26.1)

## 〈 산림 〉<sup>산림청</sup>

- (조직 육성) 산림형 사회연대경제 생태계 회복 및 지속 성장 기반 마련
- 산림자원·인프라를 활용하여 창업을 희망하는 주민공동체 발굴·지원

- 산림일자리 발전소('18~'25) - 지역 민간활동가(그루매니저)를 배치하여, 주민공동체(그루공동체)를 발굴하고, 단계별 창업을 지원(3~5년간)하여 사회연대경제 진입 지원
- ※ (성과) 8년간 458개 주민공동체 발굴·육성, 주민 3,680명 참여, 예비사회적기업 36개 지정

- **(사업 참여)** 국유림영림단(국유림 산림사업 대행)의 사연경 기업 전환\*을 유도하고, 산림치유사업 등 사업 공모·위탁시 사연경조직 우대\*\*

\* **(향후 목표)** 사회적 협동조합 전환 : 37개 ('25) → 100개 (~'30)

\*\* 산림치유사업 운영지침 개정('26.1), 산림사업 적격심사시 가점 부여('25.12), 산림 특화프로그램 위탁시 가점('26.2), 산림복지시설 부대시설 운영 우선 계약('26.4)

### 〈 섬 〉 행안부

- **(조직 육성)** '1 섬마을 1 조직'을 육성하여, 섬 마을별 특화자원을 활용한 소득기반을 구축, 주민 참여·문제 해결형 특성화 사업을 추진

※ 섬 지역은 일반 농어촌보다 소멸 위험이 높아, 사회연대경제를 통한 지역문제 해결, 소득 창출, 서비스 공급 등 필요성이 높음

#### ■ [예시] 추도 섬 영화제(경남 통영시, 추도협동조합)

- 고수온으로 인해 어획량이 감소하여 신규 소득사업 발굴 필요
- 추도로 귀촌한 영화감독이 포함된 주민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섬 영화제'를 개최하여, 숙박·식사·특산물 판매 등 소득창출 및 마을 활성화 기반 마련



### 〈 마을공동체 〉 행안부

- 지역 자원을 활용한 주민 주도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 및 확산
- 마을공동체 관련 부처별 정책·사업을 연계·조정하기 위한 법적\* 기반 마련 추진 및 분야(먹거리, 돌봄, 주거)별 마을공동체 모델 설계·확산

\*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 제정안('25.2. 박정현 의원 발의)

## VI. 향후 추진계획

-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을 통해 법적 기반 마련(~'26.下)
- 중앙지방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지방정부 전파('26.上)
- 범정부협의체 등을 통해 과제 이행 상황 주기적 점검('26.下~)

## 참고 1 국민기업 체감 20대 (10+10) 핵심 과제

**【 기업 활력 플러스+ 】 : 사회연대경제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합니다**

1	<p><b>정책금융, 은행권, 상호금융을 통한 자금 조달 기회가 늘어납니다.</b></p> <p>☞ 미소금융('26, 150억원), 임팩트펀드('26, 333억원), 은행('26~'28, 4.3조원), 새마을금고(~'30, 2,000억) 등 자금 공급 규모 확대</p>
2	<p><b>지방세 감면 확대로 세부담이 줄어듭니다.</b></p> <p>☞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등 감면 지원</p>
3	<p><b>예비·초기 창업가에 대한 초기 지원을 확대합니다.</b></p> <p>☞ 초기창업패키지 등 창업 지원 (사업화 자금, 프로그램 지원 등)</p>
4	<p><b>도약기 기업에 대한 맞춤형 성장(스케일업) 지원이 확대됩니다.</b></p> <p>☞ 사회연대경제 유형·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확대, 스케일업 지원</p>
5	<p><b>지방정부 공공계약 시 입찰보증금 부담이 줄어듭니다.</b></p> <p>☞ 지방정부와 공공계약 시 입찰보증금(5%) 부담 면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p>
6	<p><b>정부가 보유한 정보와 데이터를 한 곳에서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b></p> <p>☞ 부처별 정책 정보와 통계, 데이터를 '사회연대경제 통합 플랫폼'을 통해 한번에 제공</p>
7	<p><b>사회연대경제기업의 AI 활용을 지원합니다.</b></p> <p>☞ AI를 활용하여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혁신모델 발굴, 확산</p>
8	<p><b>국·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 확대로 공간 이용 부담이 줄어듭니다.</b></p> <p>☞ 국유재산(요율 : 2.5% → 1%), 공유재산(감면율 : 50% → 50~80%) 사용료 추가 감면</p>
9	<p><b>지역화폐·기본소득 사용처 확대를 통해 매출 기회가 늘어납니다.</b></p> <p>☞ 지역사랑상품권 및 농어촌 기본소득 사용처에 사회연대경제조직 포함·확대</p>
10	<p><b>수출과 ODA 참여 지원으로 해외 진출 기회가 늘어납니다.</b></p> <p>☞ KOTRA 해외 마케팅 행사 참여 확대 및 KOICA ODA사업의 컨소시엄 모델 도입을 통해 해외 진출 지원</p>

**【 국민 행복 플러스+ 】 : 사회연대경제와 함께 국민의 일상이 달라집니다**

1	<p><b>청년은 사회연대경제기업에서 일경험을 쌓고 첫 경력을 시작합니다</b></p> <p>☞ 청년이 일경험 및 직무 역량 강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연대경제 직업 경로 마련</p>
2	<p><b>돌봄·의료·요양 등 원하는 서비스를 내 집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b></p> <p>☞ 사회연대경제기업의 통합돌봄 서비스 공급자로서 역할 확대(지침 개정)</p>
3	<p><b>취약 지역에서도 돌봄 이용 기회가 확대됩니다</b></p> <p>☞ 사회연대경제조직이 취약지 돌봄 서비스 공급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p>
4	<p><b>사회주택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돌봄과 공동체를 함께 누립니다</b></p> <p>☞ 특화임대주택 공급 확대 (건설형 연 4,000호(26) → 연 6,000호(30) 단계적 확대, 매입형 매년 1,500호 공모) 및 사회연대경제주체형 공공지원민간임대 신규 공모 검토</p>
5	<p><b>햇빛소득마을을 통해 에너지 비용은 줄고, 주민 소득은 늘어납니다</b></p> <p>☞ '30년까지 3,000개 이상(연 700개 이상)의 햇빛소득마을 전국 조성</p>
6	<p><b>농어촌 지역에도 먹거리와 생활 서비스가 가까이 찾아옵니다</b></p> <p>☞ 농어산촌형 사회연대경제 조직 육성 ('30년까지 농촌형 조직 500개소 육성)</p>
7	<p><b>경력보유여성은 사회연대경제를 통해 다시 일할 기회를 얻습니다</b></p> <p>☞ 새일센터를 통해 경력보유여성과 사회연대경제 기업 간 맞춤형 일자리 연계 추진</p>
8	<p><b>학교 협동조합을 통해 직접 참여하며, 경제와 사회의 경험을 쌓습니다</b></p> <p>☞ 프로그램 운영 및 컨설팅 지원 확대 등을 통해 학교 사회적협동조합 활성화</p>
9	<p><b>지역의 특색 있는 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일자리와 소득이 생깁니다</b></p> <p>☞ 관광·문화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한 주민 주도 경제활동을 통해, 지역에 새로운 일자리 창출</p>
10	<p><b>일상에서 더 쉽게 사회연대경제를 배우고, 착한 소비를 경험합니다</b></p> <p>☞ 생애주기별(초중등-대학-평생교육) 사회연대경제 교육 확대</p>

## 참고 2

## 사회연대경제 종합계획 정책 과제

※ 20개 부처, 146개 과제

정책 과제	추진시기	부처
<b>1. 성장 및 경쟁력 지원</b>		
<b>① 사회연대금융 활성화</b>		
사회연대금융 전담·중개기관 지정·운영 추진	'27.~	행안부
사회성과비례 보상 사업 추진	'26.~	노동부
공제 사업 활성화	'26.~	행안부 기획처 공정위
사회연대경제금융 DB 확대	'26.~	금융위
소상공인·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26.~	중기부
서민금융진흥원 대출 확대	'26.~	금융위
임팩트펀드 조성	'26.~	중기부
사회연대경제기업 우선선발 팁스 부문 신설	'26.~	중기부
신용보증기금 개별 보증 한도 상향	'26.~	금융위
신용보증 공급 규모 확대	'26.~	금융위
소셜벤처 임팩트 보증 확대	'26.~	중기부
은행권 자금 공급 확대	'26.~	금융위
금융기관의 지역재투자 평가 배점 확대	'26.~	금융위
(새마을금고) 기금 또는 전용상품을 통한 대출 공급 확대	'26.~	행안부
(새마을금고) 햇빛소득마을 조성시 직접 출자 및 대출 추진	'26.~	행안부
개별 신탁의 타 법인 출자 근거 마련(법 개정안 마련)	'26.	금융위
<b>② 단계별 성장 지원</b>		
모두의창업 프로젝트 창업지원	'27.~	중기부
초기창업패키지 창업지원	'27.~	중기부

정책 과제	추진시기	부처
사회적기업 유형별 맞춤형 창업 지원	'26.~	노동부
자활기업 초기 창업자금 지원 및 창업 교육	'26.~	복지부
사회적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스탭업 지원사업 확대	'26.~	노동부
자활기업 신규모델 개발 및 브랜드화	'26.~	복지부
성장 단계별 지원 및 인센티브를 통한 마을기업 육성	'26.~	행안부
협동조합 연합회 중심 생애주기별 맞춤형 컨설팅 지원	'26.~	기획처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실태조사 및 고도화 지원	'26.~	국토부
교복 입찰 평가요소에 사회적 가치 등 반영(조례·지침 개정)	'26.上~	교육부
생협 육성을 위한 3개년 발전계획 수립	'27.	중기부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지원	'26.~	과기부
사회연대경제기업 성장 고도화 지원	'27.~	중기부
취약계층 고용 사회적기업 대상 인건비 지원	'26.~	노동부
새일센터를 통한 경력보유여성-사회연대경제 기업 일자리 연계	'26.~	성평등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지방정부 사회연대경제정책 지원	'26.~	행안부

### ③ 판로 확대

사회연대경제기업 민간위탁 가이드 배포	'26.下	행안부
사회적기업 우선구매율 산식 정비 검토(연구)	~'26.下	노동부
사회연대경제기업 수의계약제도 정비방안 마련	'26.下	관계부처
지방계약시 입찰보증금 면제 확대(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26.下	행안부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평가시 우대(훈령 개정)	'26.1.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 지원	'26.~	조달청
나라장터 등록 요건 완화(고시, 훈령 개정)	'26.下	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 내 전용몰 신설	'26.上	조달청
조달청 역량개발원 전문교육과정 신설	'26.4.~	조달청
나라장터엑스포 전용관 신설	'26.3.	조달청

정책 과제	추진시기	부처
지방 계약 담당자 워크숍을 통해 우대제도 안내	'26.~	행안부
민간 유통채널 활용 판로 확대	'26.~	관계부처
하나로마트 입점 가점, 로컬푸드 직매장 판매 확대	'26.~	농식품부
농수협 쇼핑몰 등 입점 지원	'26.~	농식품부 해수부
소셜벤처 활용 판로개척 지원	'26.~	노동부
대기업 ESG 연계 사회연대경제 기업 판로 확대	'26.~	산업부 행안부
민간·공공기관 협력사업 추진	'26.~	노동부

#### ④ 지원 제도 확충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지방세(취득·재산세) 감면 지원	'27.	행안부
국유재산 제한경쟁입찰 허용, 사용료 감면(시행령 개정)	'26.6.	재경부
공유재산 수의계약 요건 완화 및 사용료 감면(시행령 제정)	'27.~	행안부
고향사랑 답례품 선정시 독려, 지정기부 연계사업 추진	'26.~	행안부
지역사랑상품권 지원방향 검토	'26.	행안부
농촌 사회연대경제조직을 농어촌기본소득 사용처에 포함	'26.	농식품부
관광활동가 선발, 주민사업체 발굴·육성(관광두레PD)	'26.~	문체부
취약계층 대상 바우처 사용처에 사연경 조직 참여 확대	'26.~	문체부
현장 밀착형 공공AX 지원사업 실시	'27.~	행안부

#### ⑤ 해외 진출 지원 및 국제 협력 강화

수출 상담회, 전시회 참여 지원	'26.~	산업부
해외 시장조사, 전시회 등 참가비 및 수수료 할인 지원	'26.~	산업부
ODA 컨소시엄 방식 도입	'26.~	외교부
ODA 기업협력 사업(IBS) 참여 확대 지원	'26.~	외교부
ODA 시민사회협력 사업(취약계층 소득증대) 참여 확대 지원	'26.~	외교부
ILO 내 우호그룹 가입 추진	'26.	행안부

정책 과제	추진시기	부처
GSEF 등 국제 민관 기구 교류	'26.~	행안부

## 2. 지역 혁신 생태계 조성

### ① 혁신 모델 발굴 및 확산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사업 추진	'26.~	행안부
사회적기업 협력모델 사업 추진	'26.~	노동부
협동조합 협력모델 사업 추진	'26.~	기획처

### ② 청년 전문 인재 양성

청년의 사회연대경제 일경험 사업 추진	'26.~	행안부 노동부
청년마을 지원	'26.~	행안부
청년마을기업 지원	'26.~	행안부
대학 내 교과 운영시 관련 내용 포함, 관련 전공 운영	'26.~	교육부
앵커 제도와 연계하여 경진대회 개최, 멘토링 등 지원	'26.~	행안부 교육부
재직자, 취업 준비생, 전직 희망자 대상 교육 확대	'26.~	행안부
대학, 기업, 현장 협업 프로젝트 및 현장실습 참여 확대	'26.~	행안부

### ③ 지역 협력 네트워크 구축

민관협력체계 구축 사업 추진	'26.~	행안부
지역역량성장거점 조성 사업 추진	'26.~	행안부
협동조합 연합회 조직 중심 신규 조직 육성, 교육 사업 강화	'26.~	기획처

### ④ 국민 참여 및 인식 확산

기부금품법 전면 개정안 마련	'26.下	행안부
소액 기부 활성화	'26.~	행안부
민간주도 자원봉사센터 운영	'27.~	행안부
가칭 새마을공동체봉사단(K-Corps) 신설	'27.	행안부
주민자치회 연계법인 설립 관련 참고조례 배포	'26.下	행안부

정책 과제	추진시기	부처
경제·금융·노동 연구학교 연계 프로그램 운영	'26.~	교육부
방과후 돌봄 내 사연경 교육 프로그램 운영	'26.~	성평등부
학교 협동조합 지원	'26.~	교육부
K-MOOC 강좌 개발 추진	'26.~	교육부
지자체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사연경 프로그램 확대	'26.~	교육부
중앙·지방 공무원 대상 교육과정 운영	'26.~	행안부
교육 교재·컨텐츠 개발, 나라배움터 활용 확산	'26.~	행안부
중앙·시도 인재개발원, 부처·시도 교육원 등 활용 교육 확대	'26.~	행안부
공무원 대상 사연경 현장 체험 프로그램 운영	'26.~	행안부
사회연대경제 박람회 개최	'26.~	행안부
디지털 콘텐츠, 참여형 홍보 등 사회연대경제 홍보 확대	'26.~	행안부

### 3. 제도 및 인프라 혁신

#### ① 법·제도 기반 마련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시행	'27.~	행안부
지방공기업, 지자체 합동평가, 정부 혁신평가 지표 개편·신설	'27.	행안부
사회적기업협회 설립, 공제사업 운영 법적근거 마련(법 개정)	'26.上	노동부
협동조합 총회 소집요구권 부여(법 개정)	'26.下	기획처
협동조합 경영공시 행정제재 조치 강화	'26.下	기획처
마을기업법령 제정·시행	'26.8	행안부
소셜벤처 법률안 마련	'26.12	중기부

#### ② 정책 관리 체계화

통합플랫폼 개통·운영	'29.~	행안부
통합 통계 공표	'28.~	행안부
인증체계 개선방안 마련	~'27.	행안부

정책 과제	추진시기	부처
정책센터 운영	'26.下~	행안부
경영공시 제도 마련 및 의무화	'29.下~	행안부
지방정부 전담조직 설치, 전담 인력 지원	'26.	행안부
사회연대경제 조례 신설·개정을 위한 참고조례안 배포	'27.~	행안부
우수 지방정부 재정 인센티브 지급 및 포상	'26.下	행안부
중앙 지방 협력체계 구축	'26.~	행안부

#### 4. 분야별 선도모델 창출·확산

##### ① 사회연대경제 기반 통합돌봄 체계 구축

돌봄·복지·의료 분야 사회연대경제 민관협의체 구성·운영	'26.~	복지부
통합지원협의체, 지원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고조례안 반영	'26.下	복지부
서비스 공급자로 역할 할 수 있도록 지침에 안내	'26.3.	복지부
컨소시엄 모델 개발 지원	'26.~	복지부
취약지 서비스 공급 확충	'26.~	복지부
서비스·경영 실무교육 및 서비스 매뉴얼 개발·보급	'26.~	복지부
돌봄 분야 등 사회연대경제조직 통계 연구	~'26.下	복지부
의료사회적협동조합 인력 확보 지원	'27.~	복지부

##### ② 사회연대경제조직에 의한 주거 공급 활성화

(특화임대) 건설형도 사회연대경제 조직 참여 허용(법 개정)	'26.	국토부
(특화임대) 반환보증보험 가입의무화(법 개정)	'26.	국토부
(특화임대) 운영지원센터 설치 근거 마련(법 개정)	'26.	국토부
(특화임대) 특화시설 건설비 지원확대 추진	'26.	국토부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 청산방안 마련, 재무모델 설계	'26.~	국토부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자 선별 기준 수립	'26.~	국토부

정책 과제	추진시기	부처
(공공지원 민간임대) 조합비 관리 방안 등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	'26.~	국토부
(공공지원 민간임대) 신규사업 공모 검토	'26.~	국토부
주민행복마을 조성시 주택 관리, 생활서비스 제공 주체로 참여 확대	'27.~	행안부

### ③ 햇빛소득마을 설치 및 전국 확산

햇빛소득마을 추진단 출범 및 본사업 추진	'26.~	행안부 농식품부 기후부
바람소득마을 본격 확산	'27.~	기후부
e자립마을 시범사업 실시	'26.下~	기후부

### ④ 농어촌형 사회연대경제조직 육성 및 활성화

사회적 농장, 서비스 공동체 육성	'26.~	농식품부
서비스 공동체 서비스 협약 체결	'26.下~	농식품부
찾아가는 이동장터 지원	'26.下~	농식품부
농촌 SOC 시설 운영 참여 확대(가점 부여)	'26.~	농식품부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에 사연경 조직 참여(법률 제정)	'26.6.	농식품부 해수부
농어촌 민박사업에 사연경 조직 참여 추진(법률 개정)	'26.下~	농식품부 해수부
해양수산형 예비사회적기업 선정	'26.~	해수부
어촌형 사회연대경제조직 법적 근거 마련(법률 개정)	'26.下	해수부
어촌 신활력증진사업에 사회연대경제조직 우대(지침 개정)	'26.~	해수부
취약해안 폐기물 대응사업에 사회연대경제조직 참여 확대(지침 개정)	'26.1.	해수부
산림형 사회연대경제 육성	'27.~	산림청
국유림영림단 사회연대경제 기업 전환 유도	'26.~	산림청
산림치유사업 사회연대경제조직 우대(지침 개정)	'26.1.	산림청
1섬마을 1조직 육성을 위한 특성화 사업 추진	'26.~	행안부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 제정 추진	'26.	행안부
마을공동체 모델 설계·확산 방안 마련	~'26.	행안부